



정책자료 2024-03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인구정책기획단



BIG
DATA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책자료 2024-03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강혜규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2024년 센터 운영의 방향성 설정	1
제1절 2024년 추진 과제	3
제2절 인구정책기획협의회 회의	4
제3절 연구자문위원회 회의	9
제4절 인구정책기획단 워크숍	20
제2장 인구정책기획세미나	21
제1절 인구정책기획세미나 개요	23
제2절 제1차 인구정책기획세미나	24
제3절 제2차 인구정책기획세미나	26
제4절 제3차 인구정책기획세미나	30
제5절 제4차 인구정책기획세미나	34
제3장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사업 성과	41
제1절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발행	43
제2절 인구포럼 운영	46
제3절 제5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 포럼	52
제4장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연구과제 성과	55
제1절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수행과제	57
제2절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세부과제별 수행계획	60
제3절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세부과제 요약	103



제5장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과제 향후 방향성	153
제1절 전문가 의견	155
제2절 향후 추진 필요 과제	157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연구 영역별 2024년 추진 과제	3
〈표 2-1〉 2024년 인구정책기획세미나	23
〈표 3-1〉 2024년 인구포럼 진행 일정	47
〈표 4-1〉 인구정책기획단 2024년 수행 과제 목록	58
〈표 4-2〉 2024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사업 착수워크숍 일정	60
〈표 5-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직제 규정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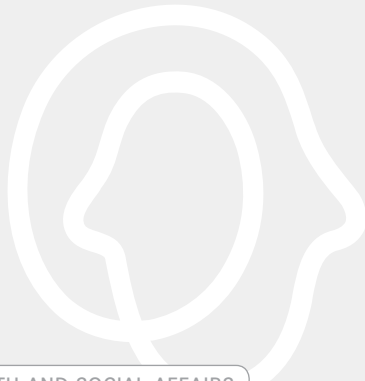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2-1] GGS-II 조사참여 국가	36
[그림 2-2] GGS-II 조사문항	37
[그림 2-3] 2기 패널구조(안): GGS 국제조사 + 한국 고유조사	37
[그림 2-4] GGS와 국가비교 분석 사례	38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2024년 센터 운영의 방향성 설정

제1절 2024년 추진 과제

제2절 인구정책기획협의체 회의

제3절 연구자문위원회 회의

제4절 인구정책기획단 워크숍

제 1 장

2024년 센터 운영의 방향성 설정

제1절 2024년 추진 과제

- 2024년 세부과제 편성 개요
- 연구과제(9개 과제)
- 인구현상 심층 분석 관련 2개 연구과제,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관련 3개 연구과제,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관련 3개 연구과제, 주요 국가의 인구정책 사례 분석을 위한 1개 연구과제(세세부 4개 과제)
- 사업과제(3개 과제)
- 인구변동 및 정책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과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3개 사업과제 편성

〈표 1-1〉 연구 영역별 2024년 추진 과제

구분	연구 영역	과제명
연구 과제	인구현상 심층 분석	인구와 기후변화: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 장래가구추계 모형 구축
	저출산 완화를 위한 대응 정책 연구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청년 이행경로 변화의 파급효과와 인구사회정책적 함의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돌봄 서비스 수급불균형 분석과 개선방안: 서비스 공급체계를 중심으로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연구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 연금자산 분석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의 의약품 사용 지원방안 연구 -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성과 향상을 고려한 사회보험의 정책방향 모색

4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구분	연구 영역	과제명
	인구정책 사례 분석	(세부) 주요국의 인구정책 비교 연구 (세세부1)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세세부2)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세세부3)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세세부4)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사업 과제	연보발행 및 연구 기반 조성	(사업)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2024년) (사업)인구포럼 운영 (사업)2024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제2절 인구정책기획협의체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4. 1. 29.(월) 14시, 다복실
- 참석자: 총 8명
 - 인구정책기획단: 이소영 단장, 황남희 연구위원, 이지혜 전문연구원
 - 인구정책기획단 외: 고숙자 연구위원, 안수란 연구위원, 윤강재 연구위원, 김성아 부연구위원, 송창길 부연구위원
- 회의 안건
 - 2025년 수행 필요 과제
 - 2024년 인구포럼 주제

2. 논의 결과

가. 2025년 수행 필요 과제

□ 인구 부문

○ 지방소멸 시대, 적정인구에 대한 심화된 연구

- 다양한 경로에서 적정인구가 제시되고 있으나, 적정인구 도출을 위한 요인간 비교, 지역 특성과의 관련성 등 적정인구 이슈를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함.
- 거대도시화, 중심 도시와 주변 도시 사이의 인구 zero sum 현상 등에 대한 관점(방지/조정/조장)을 정립하고, 각각의 관점에서 자원 분산/연계/집중에 대한 필요성 검토
- 2023년 '지역 불평등' 과제의 심화 또는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

○ 인구추계 관련

- 인구, 가구, 지역별,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인구추계 관련 연구 필요
- 인공지능을 이용한 추계 기법 등을 반영한 연구 필요

□ 보건·의료 부문

○ 안심 임신·출산을 위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방안: 유전정보를 중심으로

- DTC(Direct To Consumer) 등 다양한 유형의 유전자검사가 대중화되면서 제도권 밖에서도 기형·희귀질환 등의 가능성 확

인을 위한 산전유전자검사가 성행

- 위험요인 예방, 알권리 제고 등 긍정적 효과도 있는 반면 신뢰성이 결여된 결과해석으로 윤리적 문제 이외에도 임신 시도 자체를 포기하거나 termination 등 부작용 원인으로 작용. 유전검사·유전상담 관련 정보 제공 방안(예를 들어 공인된 유전상담인력의 양성·인증 등) 검토

○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방향

- 수요 규모 자체의 축소(아동),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통합적 관리 필요(노인·만성질환자) 등 정책환경에 대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지불보상체계는 지속가능성과 효과성, 필수 의료 보장 측면에서 적절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
- 동일 기관에서의 연속적 이용이 관찰되는 분야이면서 건강보험 급여화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었거나 확장되고 있는 분야(예: 소아청소년, 치과), ‘등록관리’ 기제가 운영되고 있는 분야(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지불보상체계를 인두제 등으로 전환하는 방향성 검토
- 2024년 연구과제(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성과 향상을 고려한 사회보험의 정책방향 모색) 후속 연구로서 검토 제안

○ 청년층 만성질환 이슈 발굴 및 예방적 관리 방안

- 지금까지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는 ‘인구고령화’에 초점을 두었고, 상대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논의는 미흡. 이는 소아·아동·청소년기와 장년·노년기 사이의 단절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음.
- 청년층 만성질환 이슈는 주로 정신보건 측면에 다루어져 왔으

나, 예방적 만성질환 관리의 출발점을 청년층으로 확장하기 위한 신체적 측면에서 이슈를 발굴 모색

- 의료-요양 연계, 방문간호/재택의료에서의 보건의료 분야 참여 활성화에 대한 연구 지속
 - 의료-요양 연계의 필요성 자체는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보건의료 분야의 참여는 여전히 소극적.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방문간호/재택의료 등으로의 서비스 확장·전환에 대응하고,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방안의 마련 필요
- 인구소멸지역의 의료-요양-돌봄 체계 구축 방안

□ 고령사회 부문

- 치매환자의 사고구제제도 도입방안
- 비자발적(잠정) 은퇴자의 재취업 경로 분석과 정책과제
- 고령친화산업: agetech와 복지의 연계, 웰다잉 분야, 건강수준별 현황과 과제 등에 포커스 맞춰서 수행 필요
 -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과제: agetech와 복지기술 연계
- 연령계층별 노후준비 현황과 과제
- 중장년층 생활실태조사(과거 중기 계획으로 제시된 과제)
- 수사과제 등 제안: 고령범죄자와 사회서비스: 구속중인 고령자 복지사각지대 (노인범죄자 특성 변화와 정책과제와 연계, 수감중 사회서비스 연계방안 등)
- 노노부양 현황과 과제

□ 재정 부문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복지재정정책

□ 사회서비스 부문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인력 수급 전망(외국인 노동자
쟁점 포함)
 - 기존 사회서비스 인력수급은 영유아나 노인 등 돌봄서비스 인
력수급에만 집중되어 있음.
 - 사회서비스분야의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빈 일
자리 등을 모두 포괄하여 서비스 수요가 많은 기관이나 업종에
대한 인력수급 필요
- 가족형태(가족구조) 다양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급여 체계 검토
 -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소득기준(어떤 서비스는 가구소득, 어떤
서비스는 개인소득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기준에 대한 논의
등 필요

□ 기타 부문

- 기업과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기업의 참여 제고 방안
- 사회적 고립의 생애 단계별 출현과 대응 방안

나. 2024년 인구포럼 주제 논의 결과

□ 공통

- 2023년 과제 중 연구성과 확산: 저출산, 고령화, 인구정책 등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 (상반기)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보완판 평가와 대응과제
- (하반기)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각 분야별 이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등의 방법)

□ 보건·의료 부문

- 치매실태조사 결과 관련 주제
- 연명의료, 웰다잉 관련 주제
-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관련 주제(소아과 폐업, 장시간 대기, 소아 응급·중증소아 등 필수의료 측면에서의 공백, 의료기관 종별 연계, 지불보상체계 등)

□ 사회서비스 분야

- 기업의 역할분담 관련 논의 필요 (작년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기업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이 외 영역에 대한 기업과의 연계, 민간 부문 활성화 등 논의 필요)

제3절 연구자문위원회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4. 2. 2.(금) 13시, 집현실

□ 참석자: 총 12명(1명은 서면자문)

- 자문위원: 이철희 교수(서울대학교), 김수정 교수(동아대학교)
 - ※ 최슬기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는 서면자문
- 원내: 이소영 단장, 황남희 연구위원, 강지원 연구위원, 우해봉 연구위원, 장인수 부연구위원, 오신휘 전문연구원, 이지혜 전문연구원, 임지영 전문연구원, 최인선 연구원, 임준경 연구원

□ 회의 안건

- 2023년 과제 평가
- 정책환경 변화
- 중장기 연구 방향
- 2025년 기획과제

2. 논의 결과

가. 2023년 과제 평가

□ 이철희 교수님

- 인구 문제 및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균형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음.
- 제목에 드러나는 연구주제가 개별 과제로서는 다소 지나치게 넓어 보임. 그리고 현재의 특정한 문제나 정책적 과제와의 연관성이 모호하다고 생각됨.
- 기본적, 일반적 연구와 함께 이 시점에 있어서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한 주제나 질문에 집중하는 과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올해 과1제는 기후변화가 흥미를 유발하고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관련, 가구추계 등을 다루고 있어서 작년에 비해 올해 과제가 더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음.

□ 김수정 교수님

-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와 노인연구센터가 별도로 있고 빈곤불평등연구실에도 청년정책연구센터, 삶의 질 연구센터 등이 있음. 인구정책기획단 연구 사업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 주제를 차별화하고 있는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기획이나 중장기 중심으로 해당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전략인지 중복인지, 차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함.
- 모니터링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과제 방식에서 사업과제로 분류하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이를테면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2022년)는 연구보고서로서 데이터분석, 전문가평가, 심층면접이 결합되어 있음. 2024년에는 모니터링 과제에 인구변동 모니터링만 포함되어 있음. 모니터링을 축소한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안하면 소용이 없음. 매년하기 어려우면 주기성을 정해놓고 몇 년에 한번 등 정책 지속성을 고려하면 좋겠음.
- 과제 명칭을 보면 청년이행, 인구추계 등 연속 과제, 주기성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런 과제는 표시를 해주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음. 청년궤적이나 이행은 전년도 연구와 차별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 플랜이 있다면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음.

나. 정책환경 변화

□ 이철희 교수님

- 출산율이 8년째 연속하여 감소하고 있음. 왜 2015년 무렵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기재부 보고가 있었음.
-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회의. 저고위의 변화 및 향후 인구정책 거버넌스 변화 가능성
- 외국인력 도입 확대 노력 진행. 그러나 제도적인 준비 미비로 난항. 이민청 설립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거버넌스는 불확실함.
- 저출산 심화와 함께 인구변화 대응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나 있음. 다만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며 이에 대한 대응책 요구하는 목소리.
- 앞으로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방향이 불투명함.

□ 김수정 교수님

- 합계출산율이 0.6대로 떨어지는 위기 상황임.
- 인구 “위기”와 관련하여 생산성 위기 담론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세대갈등 담론 심화
- “복지, 치안·국방까지 한국 사회가 ‘축소사회’에 대응 필요

다. 중장기 연구과제

□ 이철희 교수님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방법 보완 연구

- 현재 통계청 추계 방법 가운데 출산율/출생아 수와 외국인 순 유입 추계 방법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은 기관은 자체적으로 인구 추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모형 혹은 가정 설정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연구가 유용할 것. 외국인 유입 추계 등 현실적이고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는 방법, 가정, 시나리오 등에 공헌 필요

○ 인구정책 거버넌스 연구

- 인구부 신설 공약이 나오는 등, 향후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바꿀 움직임이 있음.
- 정부 혹은 다른 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이상적인 거버넌스 모색할 필요
- 행정, 정치를 잘 아는 사람과 함께 논의 필요.

□ 김수정 교수님

○ 윤석열 정부의 영아 현금지원 확대 효과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등)

- 저출산 정책에서 수급자의 권리성, 정부의 “독촉”성 급여, 급여 (기초보장 교육급여 등)의 포인트화, 재난지원금 이후 정책도구로서 카드포인트 부상. 바우처와 유사, 수급자의 권리성 제한 등. 급여가 포인트 등으로 바뀌고 있음.

□ 최슬기 교수님

○ 저출산 문제에 초점을 맞춘 패널 자료 구축 필요

- 저출산이 초래한 인과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 문제에 특화된 패널자료의 갖는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패널 자료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고 있음.
- Life Course 관점에서 연애-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사건들과 학업, 취업, 육아로 이어지는 과업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패널 자료 구축이 필요

라. 2025년 기획과제(또는 시의성 높은 과제)

□ 이철희 교수님

○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 정책평가

-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 정책은 저출산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저출산 대응 정책임.
-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효과성은 체계적으로 평가된 바 없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 2022년부터 지방소멸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연간 1조원 가까운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배분하기 시작.
- 2년간의 실적자료가 축적되었으므로, 이 기금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기술변화와 인구변화와의 상호 연관성

- 해당 주제는 오래전부터 연구되고 있지만 근래에는 실제로 AI

기술이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고, 인구변화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슈의 중요성이 커지고 실증분석의 새로운 기회가 발생하고 있음.

○ 주택가격 하락의 사회경제적 영향

-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주택가격 하락 추세가 2024년에도 지속되는 경우 근래에 들어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의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음.
- 주택가격 변동의 효과는 상승기와 하강기에 비대칭적일 수 있음.
- 주택가격의 하락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와 이것이 다시 출산과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은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에 있어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김수정 교수님

- 현안 중심의 과제와 중장기, 패러다임 전환 등 거시적인 부분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려 필요
- 선거에서 공약으로 나오는 민주당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 출산 양육 드림 패키지, 아이돌봄서비스 국가무한책임보장, 여성경력 단절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등에 대한 연구 필요
- 각국의 인구변화 대응 조직 및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인구 위기대응부) 필요
- 근거기반 저출산 정책을 위해 자녀관련휴가(출산휴가(예술인특고 출산전후급여 포함), 배우자휴가, 육아휴직)통계의 정립 및 추이 분석

- 자녀관련 휴가, 휴직제도의 이용 통계: 출산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육아휴직, (무급)가족돌봄휴직 등과 관련된 통계 생산, 최근 동향에 대한 분석
 - 현정부 저출산 정책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강조, 정책적 지원이 증가하였음.
 - 현재 관련통계는 고용보험 통계와 통계청 통계로 나뉘어짐.
 - 출산휴가 통계는 고용보험에 포함될 경우에만 집계.
 - 배우자 출산휴가는 통계에 잡히지 않음. 우선지원기업의 경우만 정부지원이 있으므로 포착됨.
 - 육아휴직 통계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등을 포함한 통계가 생산됨.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육아휴직 통계는 이용자 통계. 고용보험 뿐 아니라 여러 행정 통계자료를 연결해서 초회 사용자 중심으로 발표. 육아휴직자 수 통계 뿐 아니라 육아휴직기간 통계는 생산되지 못하고 있음(OECD Family DB에서는 9개국 리포트가 보고되고 있음).
 - 이용자수, 이용자 성비, 이용기간 등에 대한 정부 공식통계를 생산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할 필요 있음.
- 2024년 과제 중 세대간 양극화와 출산행동간 연관성에 대한 실증분석과 합의(장인수 박사님) 관련, 저출산 고령화 위기담론이 확산될수록(인구절벽, 소멸, 전쟁) 세대적 자원배분의 문제가 정치과정을 통해 갈등과 대립으로 나타나는 경향. 세대간 양극화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세대간 양극화(generational polarization) 빅카인즈,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 “미래세대 부담 담론”, 노인에 대해 ‘꼰대“ 등 인터넷에도 노인 혐오와 아동혐오 등 혐오표현들이 급증하는 추세. 담론적 갈등 상황에서 세대간 국민이전계정(현금, 현물 이전의 비율, 시간과 자산재배분)과 연령별 공적 재원지출(보사연)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세대간 자원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심층 분석할 필요.

○ 최근 한국 사회의 변곡점이나 중요한 지점에 대한 연구 필요

□ 최슬기 교수님

○ 인구정책 사례분석에서 헝가리의 대응정책 비교 연구 추가

- 헝가리 사례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대응 필요

○ 인구포럼에서 인구 문제 논점을 발굴하고 국내외 논의를 리드할 필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가 인구 문제를 다루는 국내 전문기관으로서 관련 논의를 이끌 필요성이 있음.
- 중요하지만 관심이 크지 않거나,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앞장서 문제를 리드
- 논란이 되는 주제도 전문기관으로서 논의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 수행 필요

○ 지역인구 / 이동 문제에 대한 연구 추가 필요

-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돌봄 서비스 수급불균형 분석과 개선 방안> 안에 지역인구 논점이 들어가 있음.

마. 기타 논의

□ 과제 진행 시 내용 및 방법 등 논의

○ 돌봄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시 연구 방향 및 방법 질문

- 돌봄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보려면 지역별 수급불균형 등을 봐야함. 왜 일어나고 실태가 어떤지 따져봐야 함. 사회경제적 효과는 돌봄이 없으면 가족이 일을 못하는 문제 등에 대한 편익 등 계산

○ 2015년 여성경황률 50% 돌파되었으나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음. 관련하여 기업과 저출산고령화 연구 시 연구 방향 및 방법 질문

- 2015년 터닝포인트 관련해서는, 90년대에 대학을 간 세대부터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 등이 변화. 일과 가정이 충돌하면 가정 포기. 2015년부터 본격화는 확실하지는 않고 계속 진행 중임. 요즘 경총 등 기업이나 단체에서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많으므로 기업의 역할, 인증제 실효성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경총 등에 연락해서 회원사와 조사하거나 하면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만한 분위기임.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있으므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기업 관련, 일가정양립 분야에서 기업 안이 블랙박스로 남아있음. 가족친화인증을 하지만 큰 인센티브가 안되고 약간의 혜택만 있어 국가 정책은 계속 확대되지만 기업은 변하지 않고 있음. 가족친화 관련 지표도 인사관리자가 체크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업이 바뀌지 않으면 안될 것임. 기업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게 있는지,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가

되었음.

- 기업의 일가정양립 관련해서 볼 때는 직종도 고려 필요. 비슷한 전문직이라도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분석하면 늘 보던 것과 다른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볼 수 있음.

○ 고령층의 사회적 부담을 사회적 기여로 바꾸는 것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

- 고령층의 사회적 부담 관련해서는 고령 노동시장의 유연화 필요

□ 추가적으로 필요 과제 등 논의

○ 최근까지의 인구변동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종합적 분석 연구 필요. 연구자 개별 단위로 관심 주제에 대한 분석이 아닌 국내외 연구자들이 모여서 최근의 현상에 대해 집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 출산이나 이동 등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내부 연구자들의 협업 필요. 근본적 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원인을 진단해서 정책 방향 관련 제언 필요

○ 일가정양립, 영유아돌봄 등 여러 정책에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어 인구나 저출산 효과 분석이 주요 포커스가 아님. 추후 정책 연구 시 인구쪽에서의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지역 인구변동 관련하여 생활인구 관련 실증 분석 및 전망 필요

제4절 인구정책기획단 워크숍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4. 2. 6.(화), 충남 보령시
- 참석자: (직함 생략) 이소영, 이상림, 황남희, 강지원, 오신휘, 이지혜, 임지영, 임준경, 최인선

□ 주요 내용

- 2024년 인구정책기획단 업무보고 준비, 인구포럼 주제 논의 등

□ 세부 내용

- 2024년 인구정책기획단 업무보고 준비
 - 2023년 인구정책기획단 연구과제의 성과와 한계 논의
 - 2023년 인구정책기획단 운영의 성과와 한계 논의
 - 정책 환경 변화 관련 논의 (인구변동, 정책대응, 거버넌스 등)
 - 중기 핵심의제 및 연구 추진방향 관련 논의
 - 2024년 연구개발적립금 추가 과제 관련 논의
 - 2025년 인구정책기획단 기획 과제 논의
 - 기타 건의사항 논의 등
- 2024년 인구포럼 논의
 - 2024년 인구포럼 시기 관련 논의
 - 저출산 분야의 인구포럼 주제 관련 논의
 - 고령사회 분야의 인구포럼 주제 관련 논의
 - 인구변동, 지역인구 등 분야의 인구포럼 주제 관련 논의 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인구정책기획세미나

제1절 인구정책기획세미나 개요

제2절 제1차 인구정책기획세미나

제3절 제2차 인구정책기획세미나

제4절 제3차 인구정책기획세미나

제5절 제4차 인구정책기획세미나

제2장 인구정책기획세미나

제1절 인구정책기획세미나 개요

1. 목적

-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과제 중 ‘인구현상 심층 분석’ 과제는 인구 및 저출산·고령화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되는 바, 주요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인구정책기획세미나 개최
- 또한, 인구변화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대응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최근 이슈에 대한 논의를 공유하고자 인구정책기획세미나 개최

2. 2024년 총 네 차례의 인구정책기획세미나를 개최

〈표 2-1〉 2024년 인구정책기획세미나

진행회차	주제	일시 및 장소
1	2023년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사업 주요 결과와 시사점	2024년 2월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실
2	인구추계모형 구축과 활용 방안	2024년 3월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실
3	인구 변화의 최근 이슈와 대응	2024년 6월 20일 스페이스에이드 성수지점
4	새로운 가족패널 구축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책활용 방안: 2기 여성가족패널 개편을 중심으로	2024년 12월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규장실

제2절 제1차 인구정책기획세미나

1. 발표

- 2023년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사업 주요 결과와 시사점: 장인수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토론

- 지정토론: 계봉오 교수(국민대학교 사회학과)

- 지표 활용

-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표에 대한 논의가 있어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이 자체로 인구변동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논의되는 인구변동지표체계에 아웃컴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작업하면 유용할 것임.

- 구성

- 현재의 구성은 교과서적임. 조금 더 지표체계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성 필요

- 출산 지표

- 연령별 출산율에서 출산지연 이후 캐치업이 안되는 내용, 템포 효과가 생각과 다르게 진행된 것을 잘 보여줌.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강조하면 의미있는 내용이 될 것임.

- 사망 지표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힘들게 따로 작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혼인, 이혼 지표

- 추가할 수 있다면 건수 말고 결혼율이나 이혼율 등 필요하나, 분모에 대한 자료 구축이 쉽지 않을 것임.

○ 인구이동 지표

- '절대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음. 규모 감소에 대해 조금 더 고민 필요

○ 시도 단위

- 시도 단위 지표를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

○ 지역 불균형

- 당위적인 것과 현실에서의 고민도 있고 의도도 있으나 지방균형발전 논리를 세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권역에 대한 논의 필요

□ 종합토론

○ 지역 인구 관련

- 시도별 인구증감 관련, 1기간과 2기간의 전반적인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지역을 본다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인구소멸지역 선정 시기와 기금 배부 시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나 논의 시 조심스럽게 접근 필요
- 균형발전 관련, 읍면동 단위로 분석 필요. 동부와 읍면부 등으로 분석 시 착시가 있을 수 있음. 트렌드에 반하는 흥미로운 지역을 알려주시면 연구할 때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전 계획에

도움이 될 것임.

○ 출산 지표 관련

- 출산과 지역을 연계하여 지표 산출 필요

○ 향후 발간 방식 관련

- 현재처럼 책, 브리프 등 고려 가능하며, 통계청과의 차이 등 고려 시 발간 방법 고려 필요
- 통계청과 차별을 둔다면 생활인구 등 논의 가능
- 단순 매년 수치 업데이트로 갈 것인지 심층 주제로 할 것인지 등 논의
- 모듈 방식(돌아가면서 지역을 모듈로 하거나 특정 지역을 조금 더 읍면동 단위까지 보거나 등) 고려 가능
- 안정적인 내용을 매년 업데이트 하는 것도 중요함. 연구자에 따라 주제가 달라지면 모니터링의 원래 목적과 멀어질 수도 있음. 안정된 지표는 매년 업데이트하고 원하는 주제나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 매년 달리하면 좋을 것임.

제3절 제2차 인구정책기획세미나

1. 발표

- 인구추계모형 구축과 활용방안: 송창길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토론

□ 지정토론: 오진호 교수(국립한밭대학교 기초과학부)

- 인구추계모형 구축과 활용방안의 자료, 인구추계산정 방식, 추계 방법, 시각화, 자료표현 관점에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1) 자료

- 인구추계는 기준인구(7월 1일자 연앙인구), 남녀성비, 인구변동3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통계청의 KOSIS에서는 출생은 1970~2022년, 사망은 1970~2022년, 국제이동은 2000~2022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0~1980년의 11개년 자료는 과거자료나 행정자료를 통해 추정된 자료이며, 1981년 이후부터 제공되는 출생순위별 자료, 1993년부터 제공되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와는 시계열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시계열 차이에 대해 동일한 시점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추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인구추계산정 방식

- 인구변동 3요인 추정과 모수적 모형에 따른 예측으로 이들 결과를 코호트요인법에 대입하여 통계청 방법과 동일하게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추계 방법

- 인구추계는 시나리오, 조건부 시산 방식입니다. 즉, 출생, 사망, 이동의 여러 수준(저위, 중위, 고위)의 조합에 따른 산출결과이며, 결정론적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통계적 해석과 산출방법은 용이하나 미래 불확실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많습니다. 향후 미래는

불확실성이 내포가 점진적으로 커질 것이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서 향후에 결정론적 방식에서 확률론적 예측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시각화

- 연구결과와 활용방안으로 인구변동3요인 추계결과를 원내 대시보드로 시각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보사연 연구자들의 인구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인구 관련 연구의 활용도가 높아 보입니다. 또한 숫자보다는 추이나 양상을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구성한 점이 인포그래픽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자료표현

- 인구변동 3요인의 2022년 이후의 예측값과 추계인구 결과를 과거 자료와 같이 1세 1년 간격으로 제시할 것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통계청(2023) 경우 전체 인구는 1세 1년 간격으로 제시하고 있고, 인구변동 3요인의 출생(5세, 1년 간격), 사망(5세, 1년), 국제이동(내국인 국제이동률(1세, 1년), 외국인 국제이동자수(1세, 1년) 제시)은 서로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사연 입장에서 향후 자료 표현의 일치성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 표현할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6) 기타의견

- 출산율 관련하여, 통계청(2023)의 출산율 추계는 단기적으로는 연령별 누적혼인율과 혼인대비 출산비율을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코호트출산율의 출산지연과 회복을 반영해 이 둘의 추세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2025년 저점(0.65명)을 찍고 상승하는 양상을 관망합니다. 그러나 이는 1980년 이후 코호트출산율의 감소

기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향이며, 최근의 출산율과는 거리감이 있는 예측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언컨대 통계청 가정과 방법 외에 보사연만의 보건, 복지, 의료에 특성화 할 수 있는 출산율 추계 모형을 고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종합토론

○ 추계 결과에 대한 외부 공개 관련 논의

- 추계 결과를 연구원 내부용으로만 쓸 것인지 외부에 공개할 것인지, 공개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지를 연구원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임.

○ 추계 연령범위 관련 논의

- 기대여명이 이미 90세가 넘었기 때문에 100세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고려 필요

○ 활용 관련 논의

- 빈곤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나 소그룹, 특정 계층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인구추계 대시보드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이나 User Guide 등을 만들어 배포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제4절 제3차 인구정책기획세미나

1. 발표

- 불평등과 불확실성의 보편화와 재생산 행위 - 지속적인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검토: 유삼현 교수(한양대학교 사회학과)
- 가구소득과 유배우 출산율 - 건강보험 자료 분석: 계봉오 교수(국민대학교 사회학과)

2. 토론

- 지정토론: 이소영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분절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을 많이 끼워맞추는 건 많이 접할 수 있었지만, 통합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이상자녀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더욱 주목할만 함. 지금까지의 정책이나 관련 연구에서 이상자녀수와 실제의 차이를 바탕으로 논리 전개를 펼쳤으나, 이에 반하는 현상임.
 - 작년 연구, 발표 등에서 공통적으로 ‘희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고, 근래 인식 개선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유배우출산율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획기적인 방법론이었지만, 이제는 보다 세분화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어떤 기준으로 기간을 나눠서 분석하는지, 함께 어떤 것을 종속변수로 써야 하는지 등 기존의 방법론에서 발전된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지정토론: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소득과 출산의 관계, 그 중에서도 유배우 출산율 분석을 우리나라 데이터로 전반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음.
-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럽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유럽국가들 내에서도 그 양상이 달랐다는 것이 놀라움.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수준은 다르겠지만 양성평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라떼파파’와 같이 아빠가 양육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엄마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은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양육해야 되는 상황이라 몸이 아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옴. 그래서 지금 여성들의, 특히 엄마들의 건강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과 출산율을 엮었을 때는 또 어떤 연구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함.
- 저출산의 또 다른 방책으로 이민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민 통합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50점대인 반면에 스웨덴은 80점에서 90점대로 그만큼 이민에 대해서 열린 사회임. 그럼에도 그 나라는 너무 관대한 이민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오히려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이민을 대폭 줄이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2세대들이 갭단이 운영하는 학교를 간다거나 그들과 지하경제에서 함께 종사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함. 마약, 총기사고, 살인사건 등 이런 범죄 위험국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민과 범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출산이나 돌봄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선불리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범죄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가 별로 없음. 그래서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민을 아예 안 받아들이는 등 나라마다 다르니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유럽 국가별로 범죄 관련성 등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불평등과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문헌들을 전반적으로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저출산 관련하여 연구를 하다보면 자료의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유배우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음. 결혼을 안 하고 비혼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에 대해 일본은 이미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 일본은 50세 기준으로 비혼 인구가 40~50% 정도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의 절반 정도 수준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혼 인구 관련해서도 다방면으로 접근하여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나라에서는 출산율 정책에 있어서 비혼 인구가 재원을 많이 차지하는 것에 대해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도 그렇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함.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유럽과 비슷한 축에 있는지에 대한 경향성과 관련된 연구들도 있는지 궁금함.

□ 이윤경 선임연구위원

- 불확실성이 출산을 가중시키는 것은 문화 차이의 영향도 있음. 예를 들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자녀에게 기대를 거는 것에 가치

를 많이 두는 미국에서는 불확실성이 출산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한국에서도 같은 메커니즘을 보일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

- 불확실성 관련해서 두 가지 레벨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음. 하나는 개인 단위 레벨에서의 불확실성과 다른 하나는 사회 또는 국가 단위에서의 불확실성 아니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계봉오 교수님이 작업하신 건 개인 단위 베이스인데, 다른 연구에서 두 레벨로 하는 개인이나 지역사회 이런 식으로 레벨을 관리해서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사회적인 경제 상태 등과 같이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게기가 됨.
- 저출산 관련해서 본인의 색깔이나 인식인 건데 그럼 그때의 유지 상태 등 이런 요소도 레벨로 함께 넣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함.

□ 유삼현 교수, 계봉오 교수

- 커리어와 출산 사이에서 무엇을 포기할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반면에 오히려 출산 의향은 더 잘 나온다는 얘기도 있음.
 - 항남희 박사님: 역관계가 있는 건 아닐지? 인식이 이래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인식이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닐지?
- 경제 정책 불안정성 지수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관계의 지표를 판단할 수가 있음. 불확실성과 관련된 문항들 중 예를 들면 ‘커플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인데, 계속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출산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옴.

-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점철되면서 그런 방향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음. 우리가 가족을 해체하자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가치관 관련해서 얘기할 때 가족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너무 센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함.
- 출산이 아니라, 아이의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존재, 정체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음.

제5절 제4차 인구정책기획세미나

1. 발표

- 새로운 가족패널 구축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책활용 방안 - 2기 여성가족패널 개편을 중심으로: 조선미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제4차 세미나는 발표-토론 방식이 아닌 특강의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이하에는 특강의 핵심 내용을 추려서 간략히 제시함.

가. 저출생 시대의 새로운 가족패널 구축 필요성

- 새로운 가족패널의 기획, 추진 필요성
 -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함께 급격한 가족변동을 경험하고 있음.

- 이는 돌봄위기 증가, 가족 및 일·생애 다양성 확대 등 성별·세대별 가치관 및 인식 격차는 사회구성원들의 삶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 가족변동을 이끌고 있는 청년세대는 기존 세대와 상이한 당사자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의 변화된 생애전망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저출생 기저에는 우리사회 가족변동을 추동하는 젠더, 세대 간 관계맺음의 근본적 변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는 보다 성평등한 관계 속에 자신의 생애를 기획하고 친밀성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지향과 실천이 담겨 있음.
- 저출산 현상의 가족변동 요인을 성평등 여건 속에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시의성 높은 정책 현안 반영, 국제사회 가족변동 추세 속의 우리나라 특성 비교를 위한 종단자료 구축이 필요

□ 2기 패널(저출생·가족패널조사) 개편 방향

- 여성가족패널조사(1기)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이슈
 - 패널 장기화에 따른 노후화, 마모율
 - 조사환경의 변화와 대면조사 기피
 - 긴 조사주기(2년)에 따른 패널 유지·관려 및 시의성 반영 한계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 현안 반영(1인가구, 비혼 증가 등)
 - 대상/항목의 비교가능성 이슈: 조사대상 / 조사문항

나. 저출생 국제비교 연구와 GGS Korea 구축 과정

- 저출생 국제비교 연구와 GGS Korea 구축
 -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저출생 요인 및 정책효과 비교분석 필요
 - UNECE, GGP,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
 -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동태를 다룬 국제비교 패널조사로 생애과정의 전환(예: 결혼, 이혼, 출산), 인구통계적 행동(예: 출산 의도, 가족 계획), 세대간 관계, 경제적 상황과 고용, 성역할과 성평등 등 주제로 구성

[그림 2-1] GGS-II 조사참여 국가

유형		참여국가
GGS-II (2020~)	이용 가능	(16개국)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공화국, 크로아티아,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카자흐스탄, 몰도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우루과이, 영국
	공개 예정	(3개국) 프랑스(예비조사), 홍콩(예비조사), 대만(예비조사),
	조사 준비중	(5개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u>한국(※참여 예정)</u>
GGS-I (2004~2011)	Wave1	(19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조지아,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스웨덴
	Wave2	(14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프랑스, 조지아,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스웨덴
	Wave3	(3개국)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출처: GGP, Data/GGS-Round II. <https://www.ggp-i.org/ggs-round-ii/>(2024.10.16. 인출)

[그림 2-2] GGS-II 조사문항

영역	문항	영역	문항	영역	문항	영역	문항
인구	- 출생과 이주경험 - 고용상태, 최종학력 - 주거지 정보 - 인터넷 사용 경험 - 가정 사용 언어, 이사/이주 경험, 의도 - 배우자 만남 계기 - 배우자 특성(성/연령, 경제활동, 혼인 관계) - 배우자 충돌 요인 및 해소 - 배우자와의 자녀 경험	행위	- 생활만족도 - 주관적 건강 - 배우자와의 건강 관련 의사결정 - 건강상태 - 일상생활 제약 - 신체 정보 - 행복도, 외로움 - 우울	출산계획	- 출산 의도, 자녀 계획 - 자녀 갖는다면, 삶에 미치는 영향 - 자녀를 갖기 위한 조건 충족 가능성 - 추가출산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견해 - 이상적 가족 수에 대한 견해 - 출산 예정 여부 - 임신 의도와 선호, 월경 - 출산 가능성 및 불임 - 피임 및 성적 결정권 행사 - 초경과 폐경, 번성기, 첫 성관계	소득	- 부동산 자산 - 가구 경제상황 - 가족 내 고액 이전소득 수혜 - 경제적 여건, 체불 경험 - 가구 순소득 등
	생애 이력		- 피트나와의 동거 - 피트나와의 혼인 - 피트나와의 자녀 - 피트나와의 관계 종료 - 동거 외 자녀 - 자녀(친자녀, 양보녀녀, 입양자녀) - 자녀 사망 및 동거, 주거지 - 자녀 불행 - 자녀 활동제한 및 건강상태 - 자녀 동거, 만남, 연락, 거주거리 - 자녀 관계 만족도		- 고용상태 만족도 - 고용 시작시기, 고용상태, 직업 - 근무시간 및 통근시간, 특성 - 재택근무, 야근 - 일가정 양립 어려움 - 실업가능성 - 퇴직 및 학직 의도 - 조직유형, 총사상 지위 - 퇴직근무 - 퇴고용인 수 - 부업 - 이전 일자리, 직업, 고용상태		직업 이력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 조사문항 구조

- GGS 본 조사 문항: 3년마다 한 번 전체 세트를 조사하며(1차, 4차, 7차), 나머지 해에는 핵심 문항 중 약 70% 정도 선별 조사(2차, 3차, 5차, 6차, 8차 이후)
- 한국 고유 조사 문항: 한국의 고유 코어 문항은 매년 조사, 그 외 문항은 GGS에 참여하지 않는 해에 한국 부가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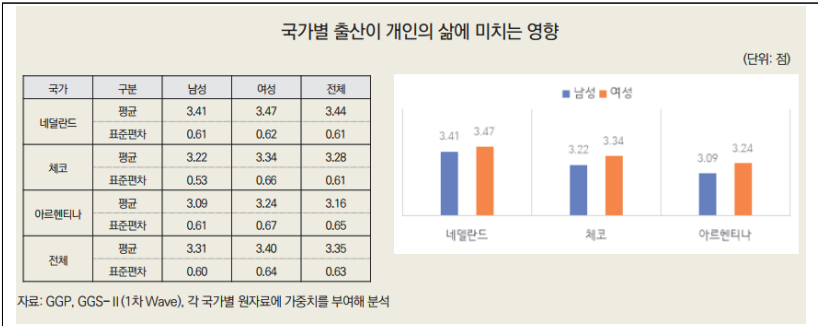
[그림 2-3] 2기 패널구조(안): GGS 국제조사 + 한국 고유조사



□ 저출생 대응과 GGS 한국조사 참여 의의

- GGS 국제조사 참여로 정책효과와 국제 비교분석에 따른 과학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강력한 근거자료 제공 가능
- (참고) 저출생·가족패널(영문명: GGS Korea) 예비조사 실시('24년~'25년)
 - 목적: 신규패널 구축 전 사전조사 수행으로 적정성 검토 및 개 선사향 도출
 - 조사대상: 전국 17개 시도 만 19~59세 남녀가구원이 있는 2,600가구의 적격가구원 2,600명
 - 조사방법: 혼합조사 방법(TAPI+CAWI) 도입

[그림 2-4] GGS와 국가비교 분석 사례



주: 동 내용은 202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반과제 “저출생 대응 가족패널조사 사전연구(I)(조선미 외, 2024.12월 발간 예정)”의 연구결과 중 이근복 객원연구원(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저술한 내용을 인용하였음.

□ 한국 고유문화 개발과정

○ 문화 설계 방향

- 가족구성과 관련된 성평등 여건이 파트너십 형성
- 가족구성, 임신·출산, 돌봄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출산, 파트너십, 돌봄(육아), 가족변동, 생애전망(일과 가족에 대한 미래 기대/전망)과 관련하여 젠더와 성평등 함의 검토
- 1기 여성가족패널조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부 문화 연속성 유지
- (예시) 복수주거지와 가구원에 대한 정의

다. 정책 활용 방안

□ 새로운 가족패널의 특성

- 패널연구(종단연구): 여성가족패널에 이은 국내 유일의 가족패널 조사
- 국제비교연구: GGS Korea 참여로 가족구성 및 출산 요건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수행 가능

□ 저출생 대응 가족패널조사 특성

- 젠더, 세대 간 차이를 야기하는 인식/태도 및 가치관 문화 강화
- 영역별 요인의 인과성을 고려한 모델 설계 가능
- 젠더관계뿐만 아니라, 세대 간 조사로서의 강점을 지님
- 파트너십과 출산 및 자녀갖기, 섹슈얼리티에 대한 실천의 가시화, 다양성 고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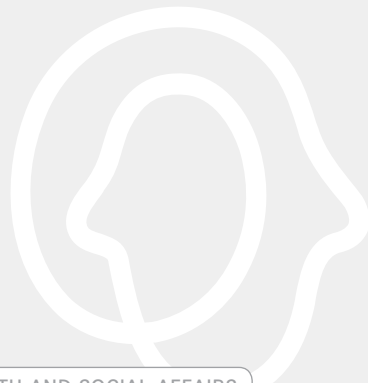
□ 정책 활용 방안

- 해외에서 도입된 정책효과에 대한 비교국가 연구 수행 가능
 - 유사 정책의 국내 도입에 따른 효과성 검증, 제도 도입의 성패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여건 진단 가능
- 정책 투입이 기회 제약에 대한 인식 변화와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 일과 가족에 대한 생애전망의 지향에 따른 變化 궤적 예측 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사업 성과

제1절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발행

제2절 인구포럼 운영

제3절 제5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 포럼

제3장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사업 성과

제1절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발행

1.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급격한 인구변동에 따른 인구통계의 체계화 필요

○ 한국의 인구변동은 유례 없이 급격한 속도에 큰 폭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인구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추적, 관리할 필요가 다분함.

- 또한, 이러한 급격한 한국사회의 인구 변동은 사회정책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거대한 조류를 촉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변동의 주된 특성으로서의 저출산, 인구 고령화에 주목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측면에서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 이는 우리사회의 인구변동과 정책 간 유기성이 주도 면밀하게 고려되지 못한 한계점에 적지 않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즉, 현재의 인구변동 특성을 정교하게 관측하는 것은 향후 인구변동 대응 정책의 실질적 효과성과 적절성, 시의성을 종합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인구변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운영의 필요성 대두

○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인구 변동의 현황과 변동 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관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정책 대응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인구변동을 관측하고 추적, 관리하는 소위 인구변동 모니터링(demographic monitoring)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관련 인구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생산·구축하고, 이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형식임(2020년부터 진행).

○ 또한, 인구 관련 지표를 종합적으로 집대성하고, 차별성 있는 인구 지표를 추가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변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관측하고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인구정책연구실에서 202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인구 변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기존 연구의 성과를 기초로 지속적인 인구통계 모니터링을 위한 연보 작성을 목적으로 함.

○ 2024년 연보 발생 사업은 2020년 구축된 지표 및 2022년, 2023년 생산된 지표의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통시적 검토와 해석이 주된 목적임.

- 요컨대, 매년 지속적으로 인구정책기획단에서 발간되는 인구통계자료집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연보 발간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연구내용

□ 시범사업(2022년) 및 2023년 모니터링 구축 방안 연구 검토

- 인구통계의 주요 개념 정리
- 인구 모니터링 지표 산출 자료원 정리

□ 인구 모니터링 지표 산출

- 출생과 출산
 - 출생률, 출산율, 출생의 구성 및 특성, 재생산율 등 출생, 출산 관련 지표
- 혼인과 이혼
 - 혼인, 이혼 관련 지표
- 사망
 - 사망률 변동 및 사망원인별 사망률 관련 지표
- 인구이동
 - 국내/외 인구이동 관련 지표
- 인구의 증감
 - 전국 및 지역 단위 인구 증감 관련 지표
- 인구의 구성
 - 연령 및 성별 구성 관련 지표
 - 혼인 상태 및 가구/가족 구성 관련 지표

- 인구의 분포
 - 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집중 관련 지표
- 국제 동향
 - 세계 인구 현황과 전망 갱신, 인구변동 요인, 규모와 구조 관련 지표 검토
- 정책 대안 제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개선 등

제2절 인구포럼 운영

1. 인구포럼 운영 목적

- 인구포럼은 인구문제 전반에 대한 다학제적 논의를 통해 사회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며, 나아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운영됨.
-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쟁점을 공유함.
- 연구 성과 확산은 물론 인구문제와 관련한 정부 정책, 관련 사회 대응에 대한 대국민 접점의 기제로써 활용
- 2024년 총 2차례의 인구포럼과 2차례의 공동 포럼을 개최

〈표 3-1〉 2024년 인구포럼 진행 일정

진행회차	주제	일시 및 장소
제33회 인구포럼	KIHASA-KASWEA Joint Forum	2024년 1월 13일 Embassy Suites DC Convention Center (Washington DC)
제34회 인구포럼	인구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	2024년 3월 2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제35회 인구포럼	아동돌봄과 주거의 통합적 접근	2024년 12월 5일(목) 포포인츠 서울역점 미팅룸 19F
제36회 인구포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결혼, 출산, 세대 가치관을 중심으로	2024년 12월 20일 엘타워 안단테홀(2층)

주: 제33회, 제34회 인구포럼은 각각 KASWEA(Korean American Social Work Educators Association),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와 공동으로 개최·운영함.

2. 제33회 인구포럼

□ 주제: KIHASA-KASWEA Joint Forum

□ 개최목적

○ 2023년 KASWEA(Korean American Social Work Educators Association)와 체결한 MOU에 일환으로 학술적 교류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인구포럼 개최

○ 아동보호, 정신건강 등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사례 및 시사점 공유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년 1월 13일(토) 12:00~16:00

○ 장소: Embassy Suites DC Convention Center (Washington DC), District Room

○ 방법: 대면 및 비대면 생중계(Zoom)

□ 주요내용

- (주제 발표 1) Turnover and intend to leave among child welfare caseworkers in Pennsylvania
- (주제 발표 2) Child Protection System in Korea and Future Tasks to Improve Quality of the Services
- (주제 발표 3) Status of Mental health in Kore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Mental Health Services
- (주제 발표 4) Integrating Managed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with Behavioral Health in the Community Health Choices Program
- 토론

□ KASWEA와의 추후 협력 방안 논의 (2024년 1월 14일 진행)

3. 제34회 인구포럼

□ 주제: 인구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

□ 개최목적

- 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고착화 등에 따라 발생하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모습과 노인의 삶에 대해 논의하고, 노동, 돌봄 등 영역별 정책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인구포럼 개최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년 3월 21일(목) 14:00~16:50
- 장소: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 방법: 대면

□ 주요내용

- 인구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
 - (주제 발표 1) 인구·기술 변화와 고령노동의 미래
 - (주제 발표 2)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분석
 - (주제 발표 3) 미래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 신경인지장애(치매)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주제 발표 4) 고령 범죄피해자 특성과 정책과제
 - 토론
- 종합토론

4. 제35회 인구포럼

□ 주제: 아동돌봄과 주거의 통합적 접근

□ 개최목적

- 저출산 현상의 주요 이슈인 돌봄, 주거,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개별적 접근을 넘어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이해, 대안을 찾아가는 맥락에서 아동 돌봄의 통합거점 설치와 사회주택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년 12월 5일(목) 13:00~15:00
- 장소: 포포인츠 서울역점 미팅룸 19F
- 방법: 대면

□ 주요내용

- 아동돌봄과 주거의 통합적 접근
 - (주제 발표 1) 아동돌봄 통합거점 설치 운영 방안
 - (주제 발표 2) 사회주택의 공동체 육아·돌봄에 관한 연구
 - 토론
- 종합토론

5. 제36회 인구포럼

□ 주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결혼, 출산, 세대
가치관을 중심으로

□ 개최목적

-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인식을 ‘결혼’, ‘출산’, ‘세대’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함께 검토함.
 - 구체적으로는 혼인, 출산, 가족 형성 파트와 연령규범, 연령차별 및 세대 갈등 파트로 구분

- 성인 남녀 4,000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발표와 토론 진행
- 실제 국민들을 초대하여 '결혼', '출산', '세대'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듣고 공유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년 12월 20일(금) 11:00~16:30
- 장소: 엘타워 안단테홀(2층)
- 방법: 대면

□ 주요내용

- 특강
 - 교육 및 소득에 따른 출산율 차이 변화
- (세션1) 저출산
 - (주제 발표 1) 혼인, 출산, 가족 형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가치관
 - 토론
- (세션2) 고령화
 - (주제 발표 1) 연령규범, 연령차별 및 세대 갈등에 대한 국민인식과 가치관
 - 토론
- (세션3) 국민패널 좌담회
 - 결혼, 출산, 세대 가치관에 대한 국민패널 좌담회

제3절 제5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 포럼

□ 주제: Low TFR, Aging Population, Policy Responses

□ 개최목적

- 한국과 일본 양국의 사회현상과 정책 대응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17년부터 ‘한·일 사회정책 정례 포럼’을 매년 개최해 오고 있음.
 - 그동안 포럼은 양국을 오가며 개최해왔고, 2020~20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음.
- 2024년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중심으로 인구동향, 생식의료, 일·가정 양립, 고령자 케어 정책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년 9월 5일(목) 13:30~17:20
-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실
- 방법: 대면

□ 주요내용

- (세션1) Population Trend
 - (주제 발표 1) Reginal Population Decline in Korea: Policy Responses and Future Directions
 - (주제 발표 2) Future Population Change by Region and

its Demographic Factors

- (주제 발표 3)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Married Women's Life Course through First Marriage, First Childbirth, and Employment, and Never-married Women's Attitudes on their Future Life Course

- 토론

○ (세션2)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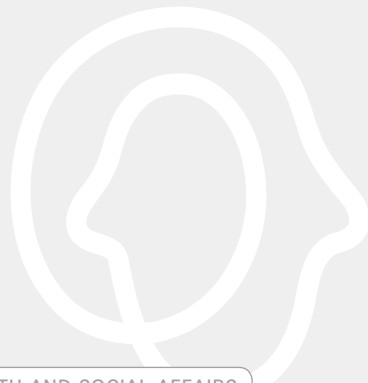
- (주제 발표 1)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 South Korea
- (주제 발표 2) Low Fertility in Asia and the Role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 토론

○ (세션3) Elderly Care

- (주제 발표 1)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Housing Support for the Elderly in South Korea
- (주제 발표 2) Care Resources and Residential Mobility in Later Life
- (주제 발표 3) Changes in Household Structure and Elderly Care

- 토론



제4장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연구과제 성과

제1절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수행과제

제2절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세부과제별 수행
계획

제3절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세부과제 요약

제4장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연구과제 성과

제1절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수행과제

□ 2024년 세부과제 편성 개요

-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내 9개 연구과제(세세부 4개), 3개 사업 총 29개 과제 수행
- 출연금 과제 3개(일반 1개, 수시 1개, 연구개발적립금 1개), 수탁 과제 14개 수행(이월 포함)
- 출연금 연구과제는 총 4개의 분야로 구성됨. 인구 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연구, 인구정책 사례 분석 분야임.
 - 인구 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영역에서는 ‘인구와 기후변화: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 ‘장래가구추계 모형 구축’ 2개 과제가 수행됨.
 -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영역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청년 이행경로 변화의 파급효과와 인구사회정책적 함의’,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돌봄 서비스 수급불균형 분석과 개선방안: 서비스 공급체계를 중심으로’ 3개의 과제가 수행됨.
 -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연구 영역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 연금자산 분석’,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의 의약품 사용 지원방안 연구 -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성과 향상을 고려한 사회보험의 정책방

향 모색' 3개 과제가 수행됨.

- 인구정책 사례 분석 영역에서는 '주요국의 인구정책 비교 연구' 1개 과제가 수행되었으며, 세세부 과제로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정책을 분석하였음.

- 사업은 인구변동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발행'과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2개 사업과제 편성
- 수탁과제의 발주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교육부,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

〈표 4-1〉 인구정책기획단 2024년 수행 과제 목록

구분		과제명
출 연 금 과 제	(일반/연구) 인구 현상 심층 분석	인구와 기후변화: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 장래가구추계 모형 구축
	(일반/연구) 저출산 완화를 위한 대응 정책 연구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청년 이행경로 변화의 파급효과와 인구사회정책적 함의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돌봄 서비스 수급불균형 분석과 개선방안: 서비스 공급체계를 중심으로
	(일반/연구)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연구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 연금자산 분석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의 의약품 사용 지원방안 연구 -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성과 향상을 고려한 사회보험의 정책방향 모색
	(일반/연구) 인구정책 사례 분석	(세부) 주요국의 인구정책 비교 연구
		(세세부1)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세세부2)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세세부3)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세세부4)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구분		과제명
	(일반/사업)	(사업)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2024년)
	연보발행 및 연구 기반 조성	(사업)인구포럼 운영
		(사업)2024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일반/연구)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수시)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 연구
	(연개금)	인구고령화시대 범죄 특성과 사회정책대응방안 모색: 고령피해자를 중심으로
수 탁 과 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 연구
		2024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및 제4차 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고령사회 대응 지표체계 개발 연구
		주거형태가 출산율 등 인구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보건복지부)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진단지표 세분화 방안 연구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노인복지분야 종사자의 성인지적 실천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제6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위탁 용역(기획·운영) 지원
	(교육부)	2024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국토연구원)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 의료분야
		인증 친화도시 사업 추진 현황 및 지역간 비교 분석

제2절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세부과제별 수행계획

□ 연구과제별 세부 계획은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사업 내 세부과제의 착수워크숍을 개최하며 발표하였고, 1년간의 연구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였음.

□ 착수워크숍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4. 3. 6.(수), 8.(목), 세종실

○ 착수워크숍 세부 일정과 자문위원

〈표 4-2〉 2024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사업 착수워크숍 일정

연 번	세부 일정	과 제 명	연구 책임자	자문위원		
2024. 3. 6.(수)						
1	10:00-10:30	인구와 기후변화: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	우해봉	원내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윤은주	국토연구원
2	10:30-11:00	장래가구추계 모형 구축	송창길	원내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김형수	국민연금연구원
3	11:00-11:30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장인수	원내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계봉오	국민대학교
4	13:00-13:30	청년 이행경로 변화의 파급효과와 인구사회정책적 함의	김문길	원내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13:30-14:00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돌봄 서비스 수급불균형 분석과 개선방안: 서비스 공급체계를 중심으로	김은정	원내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정효정	충원대학교
6	14:00-14:30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 연금자산 분석	신화연	원내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김형수	국민연금연구원
7	14:30-15:00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의 의약품 사용 지원방안 연구 -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박은자	원내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박혜경	차의과학대학교

연 번	세부 일정	과 제 명	연구 책임자	자문위원		
2024. 3. 7.(목)						
1	10:00-10:30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성과 향상을 고려한 사회보험의 정책방향 모색	하솔잎	원내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전영준	한양대학교
2	10:30-11:00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보혜	원내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3	11:00-11:30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최경덕	원내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안수지	국회예산정책처
4	13:00-13:30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이소영	원내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이철희	서울대학교
5	13:30-14:00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신영규	원내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이자연	예테보리대학교
6	14:00-14:30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박중서	원내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김근태	고려대학교

1. 과제별 자문 의견과 반영 계획

□ 인구와 기후변화: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국제 기구 논의에서 기후 변화가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변화와 인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본 연구는 특히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하여 급격한 인구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과제라고 판단됨.
- 기후변화와 인구변화 모두 중장기적인 정책을 요하는 이슈이며, 상호 관련성 역시 높는데 반하여, 관련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연구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상기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인구와 기후변화와의 연계성, 주요 이슈, 기후변화에 대응정책에서의 인구변화 반영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본 연구의 목적 역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인구학계에서 기후 변화와 인구와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후 변화가 국내에서는 심각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기후 변화는 심각하게 이루어졌지만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인지, 아니면 해당 이슈는 심각하나 학계의 무관심에 의한 것인지 등
- 국내 선행 연구와 실증 분석 결과가 전무하고 기후 변화와 인구와의 관계에 대한 국내 현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정책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지 우려가 됨. 예를 들면, 기후 변화가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국내에 아주 미비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그동안 기후변화 관련 연구에서 인구변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사례가 있었으나, 인구변화와 재자연화 등등 단편적 부문에 한정되어 있었음. 또는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에 인구에 관한 지표를 반영하였더라도, 실제 계획 및 정책에 인구변화를 고려한 경우는 거의 없었음.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공간규모와 분야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와 인구간의 관계성을 보는 본 연구의 차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본 연구는 문헌 고찰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내 현황 파악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실증 분석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착수 워크숍 자료에서 인구 통계 자료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였는데, 인구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적인 실증 분석을 수행하여 이것을 기초로 인구 통계 자료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봄.
- 연구의 내용적 범위가 폭넓기 때문에, 연구의 틀에 맞추어 문헌 분석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자료 수집 및 분석은 공간규모(전지구, 국가, 지역)와 현상, 대응(적응, 완화)에 대한 부문을 구분하여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람.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문헌 고찰 이외에 국내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 분석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기후변화에 대한 인구학 분야의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학술적인 기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됨. 차별성 있게 수립된 틀 내에서 다양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따른 학술적 기여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책활용 가능성) 정책 대안을 기후 변화 → 인구에 미치는 방향 차원에서 검토해 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기후 변화 → 인구 측면에서는 완화와 적응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보이며, 팬데믹 이후에는 회복력(Resilience) 측면에서의 정책 방안도 강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또한 기후 변화의 영향은 사회계층별로 다르고 특히 취약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형평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내면 좋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인구 → 기후 변화 측면에서는 인구에 대한 조정(예를 들면 출산 억제, 거주지 이동 등)이 필요한데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가능할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장기적인 인구정책 및 기후변화 정책이 상호 연계되는 출발점이 될 것 같음.

○ 추가 의견

- 자료에서 한국이라는 포인트가 잘 드러나지 않아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녹일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음. 인구와 기후에 대한 내용과, 한국의 인구 특수성, 기후위기의 특수성이 어떻게 차별되는지 도출되었으면 함.
- 제시된 분석틀이 실증적인 내용을 담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음. 인구감소를 문제로 파악하지 않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기후위기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긍정적이라 보는 경우도 있을 것. 시각의 차이에 대해 연구자의 판단이나 생각을 어떻게 보여주실지 궁금함.
- 인구학에서 바라보는 환경과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는 환경이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보임. 기후는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관점이나 지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함.

- 개념이나 범위의 차이에서 이 연구에서 인구나 인구정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4장 2절에서 인구변화와 기후의 영향 부분이 잘 분석되었으면 함.

○ 반영 계획

- 착수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틀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임.
- 기후변화 관련 경험적 자료의 분석 여부는 자료의 활용 가능성과 분석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향을 설정하겠음.
- 착수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틀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임.
- 착수워크숍에서 논의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의 정책 논의(계획)를 살펴볼 예정임. 자료 검토 및 분석 과정에서는 가능한 수준에서 공간적 범위와 대응 방식 등을 구분하여 논의하겠음.
- 착수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임.

□ 장래가구추계 모형 구축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최근 1인 가구나 비친족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한 가구 추계가 필요함.
- 한편으로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는 전망 기간이 다소 짧고, 출생코호트별 각세별 수치를 제공하지 않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이를 고려할 때보다 이 연구를 통해 제공될 가구추계 결과는

현재 원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여러 모형들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시의적절하고 활용도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연구임.
- 사회보장정책에서 가구기준 정책 활용을 고려하면 필요성과 목적은 충분히 공감함.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이 연구는 통계청이 사용하던 가구주율법을 적용한 뒤, 이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됨.
- 다만, 2023년에 통계청에서도 새로운 가구유형 및 가구원수별 가구수 추계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구유형 및 가구원수별 추계가구 작성방법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해당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보임.
- 가구추계 관련 몇몇 선행 연구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구 추계 결과의 직접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차별성이 있음.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통계청의 방법론을 복원한 뒤, 이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가 다소 모호함. 추후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다차원 모형의 이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차원 모형은 인구변화 요인이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기가 용이하고, 개인이 가구에서 위치하고 있는 지위(position) 변동을 유동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전이확률을 산출하기 위한 별도의 표본조사가 필요하고, 전이확률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이에 따라 학술영역에서는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공식 인구추계에서 다차원 모형을 이용한 사례는 드뭄.
-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 다차원 모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보임.
- 전이확률에 기초한 모형 구축시에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을 적용하면 보다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 기대됨.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연구 내용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 전개 역시 체계적이라 판단됨.
- 다루고자 하는 범위가 상당히 방대해 보임. 연구기간을 감안하여 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면 보다 좋을 듯함.(ex. 추계기간을 장기보다는 중기로, 활용도가 높은 연령대에 대해서만 각세별 가구주의 범위를 고려)
- 기술적으로는 가구추계에서의 전체 인구 규모가 기존의 각세별 인구추계 결과와 유사하도록 (가능하면 일치하도록) 일종의 제약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통계청의 가구추계 방법을 토대로 모형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추계 방법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가구추계 관련 연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술적인 기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함.

- (정책활용 가능성) 가구추계 결과를 재정전망에 활용함으로써 장기전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장기 재정 운용 계획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반영 계획

- 통계청의 방법론 검토 시, 최근 통계청에서 추가 연구한 내용들도 검토하여, 본 작업의 신뢰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음.
- 통계청의 방법론을 우선 재현하고, 이후 방법론을 확장하여 우리 원에서 차별화 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 특히, 대상인구(추계인구에서 시설 가구 등의 인구를 제외한 인구) 산출에서부터 혼인상태별 전이확률과 가구 구성을 나누는 방법 등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검토할 예정임.
- 보고서의 작성 방향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음. 먼저, 지난 인구추계모형구축과 동일하게 통계청의 방법론을 그대로 재현하는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두 번째로는 이 방법론에서 우리 원의 정책연구에 적합한 형태로의 수정이 가능한 부분을 찾는 것임.
- 즉, 첫 번째는 통계청의 기준인 5세 단위 30년 기간 동안의 추계가 될 것이고, 내부적으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각 세별, 가구의 다양한 이동행태, 그리고 추계기간을 늘리는 등의 작업은 추후 공동연구진과 내외부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결정해나가도록 하겠음.

□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합의: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그동안 추진된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단편적이며, 파편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좀 더 거시적이고 사회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대응이 필요함을 근거로,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 매우 시의 적절하고, 학술적 정책적 타당성을 갖고 있음. 이런 맥락에서 (구조적 차원으로) 다양한 층위에서 진행된 세대 간 양극화 현상이 출산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문제 설정은 타당함.
- 이 연구는 세대 간 불평등과 출산 행동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연구라 할 수 있음. 저출산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결과이고 세대 간 불평등이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판단함.
- 단, 연구과제의 “세대 간 양극화”라는 표현은 이해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소득 양극화”라는 표현은 소득 상위계층과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의미함.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10% 집단과 하위 10% 집단의 소득 격차가 증가할 때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기술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세대 간 양극화”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려워 보임. 세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이 정의에 기반해서 어떤 세대들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증가할 때 세대 간 양극화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구조적 접근 또는 구조와 미시의 통합적 접근을 주장하는 이론적 논의,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 실증분석을 통하여 영향 관계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 성과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
- 본 연구가 계획하는 연구주제와 분석 방법 등은 전반적으로 선행연구에 비해 독창성을 잘 드러내고 있음.
-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세대 간 불평등(양극화)을 이해하는 방식은 새로운 시도로 보임.
- 단, <그림>으로 제시한 연구모형의 실증연구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이 있음. 구체적인 분석 자료 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전반적으로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방법론은 적절히 계획하고 있음. 일부 개념 정의, 연구 범위의 설정에서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음. 세대의 정의는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양극화의 개념 정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양극화로 포착하고자 하는 사회 구조적 특성이 일반적인 거시-구조적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양극화’ 표현보다 다른 적절한 개념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됨.
- 개념적 연구 모형이 실제 실증분석에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세대 개념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출생 코호트를 기준으로 세대 구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텐데, 이와 같은 구분의 적절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세대 간 불평등의 변화 양상에 대한 경험적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연구 내용은 향후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목차 구성 내용 분석의 범위 등은 적절히 계획되어 있음.
- 목차는 대체로 적절해 보임. 단, 앞서 지적했듯이 세대 간 불평등의 증가를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기보다는 세대 간 불평등의 변화 양상 자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임.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출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 영향관계를 실증분석한다면 기존 연구 영역에서 크게 진전된 기여가 될 것임. 세대 간 불평등의 변화와 출산변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서 정교한 연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책활용 가능성) 출산 행동의 구조적 요인과 영향관계를 확인한다면, 이를 기초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한다면,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으로 세대 간 불평등에 주목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추가의견

- 주요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가능할지 궁금하며, 출산행동이라는 표현도 낯설게 느껴짐. 양극화는 거시적 측면의 용어이

나 출산행동은 개인의 행태이기 때문에 차원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음.

- 양극화는 입증과 조작적 정의가 까다로운 데다가 대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쪽을 지지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양극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 의미있을 것임.
- 청년 연구를 한 분과 함께 협업하면 어떨까 하며, 청년 연구를 통해 나오는 연구결과, 시사점과 차별화된 정책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함.
- 착수워크숍 자료는 연구의 필요성에 포커스가 많이 맞추어져 있어 연구목적이나 분석방법 등을 명확히 기술하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임.
- 양극화라는 표현이 극단적으로 생각됨. 양극화에 대한 다른 시각(없다, 혹은 부정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반영 계획

- 양극화에 대한 개념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아울러, 양극화로 포착하고자 하는 사회 구조적 특성이 일반적인 거시-구조적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여 연구의 제목과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중에 있음. 아울러, 구체적인 연구문제 설정과 이에 따른 연구 방법(실증분석 관련)을 조속히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겠음.
- 본 연구는 세대 간 양극화가 증가하고 있음을 가정하거나 전제

하기보다는 말씀주신대로 세대 간 양극화 변화 양상에 대한 경험적 확인(정형화된 발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저출산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를 해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중 그간 두루 조망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세대 간 불평등의 심화(양극화) 특성이 저출산 양상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지는 않을까, 있다면 그 매커니즘은 무엇인가를 탐색하기 위한 경험적, 탐색 연구의 성격이 짙고 이에 지속적으로 관련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쟁점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이에 따른 연구모형도 조속히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하여 청년 연구자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음.

□ 청년 이행경로 변화의 파급효과와 인구사회정책적 함의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현대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과정의 보편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특히 표준화된 생애과정에서 이탈하는 현상에 주목하는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 연구는 생애과정의 탈 표준화에 대한 논의를 인구사회 경제적 비용과 연결시키면서, 사회보장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함.
- 전통적 사회구조를 전제로 한 사회보장 정책의 한계를 고려하면, 성인기 이행의 다양성을 고려한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적 함의를 탐구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며, 학술

적 정책적 의의를 갖고 있음.

- 이 연구는 청년기본조례에서 정책 대상 연령 정의도 40대 후반까지 포괄하는 기초 지자체가 생기는 등 청년정책이 본래 취지인 성인 이행기 지원에서 멀어지는 상황에서 청년의 이행경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이 연구에서는 성인 이행기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 가족 및 거시적 사회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구사회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행기 변화 중에서 이행기 지원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이행기 변화에 대한 원인 규명이 개인과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성인이 이행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양성을 규명하는 데 그치거나, 개인적 수준의 영향관계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이 연구는 인구 사회 경제적 차원의 거시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음.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OECD 국가 연도별 횡단 자료 결합 데이터 셋, 기존 복지패널,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경험적 분석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다만 별도의 설문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 진행과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소규모 설문조사의 한계가 명확한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신뢰도가

확인된 기존 자료의 활용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현재 예산으로 볼 때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2차분석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임.

- 양적 연구의 경우 성인기 이행 지연의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가 필요해 보임. 특히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과는 달리 거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게 필요함.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연구의 범위가 매우 방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적 차원, 가족적 차원, 거시적 차원에 해당하는 핵심 부분만으로 연구 범위를 압축할 것을 제안함. 그외 연구의 구성은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적절히 구성되어 있음.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성인기 이행의 개인, 가족, 거시적 세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구 성과를 제시한다면, 선행연구와 차별적인 학술적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정책활용 가능성) 사회보장 정책과 청년 지원정책 분야에서 의미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반영 계획

- 연구방법과 관련, 제한된 예산을 감안할 때 별도의 설문조사로 대표성,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미시적 영향(개인사, 가족)과 관련해서는 한국복지패널, 한국노동패널 등 대표성 있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함.

- 연구 내용과 관련, 제안해주신 것과 같이 세 가지 범주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하고자 함. 연구범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내외부 연구진을 적극적으로 섭외하여 분담하고자 함.
- 연구결과 기여도와 관련, 제안해 주신 것과 같이 개인, 가족, 거시적 측면의 분석결과를 분절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총합적 관점에 기초하여 정책함의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이행기 변화는 지연을 비롯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임. 이론적 측면에서는 지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양상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함. 다만,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데이터 이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럼에도 추후 데이터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음. 또한 이행기 변화의 원인은 2023년 선행연구 결과를 갈무리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함. 선행연구 결과(원인)와 본 연구 결과(영향)를 종합하여 정책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거시적 파급효과와 관련해서는 OECD Familiy Database, Fertility Stat, UNU-WIID 등 국제거시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GMM 등 동태적 패널분석을 활용하고자 함. 출산율, 경제성장률 등 장기효과 분석에 유용한 방법론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론을 선택하여 활용하고자 함.

□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돌봄 서비스 수급불균형 분석과 개선방안:**
서비스 공급체계를 중심으로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저출생으로 생애초기 집중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최근 영유아에 대한 돌봄정책(부모급여, 일가족 양립정책, ECEC서비스) 전반에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여러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수급불균형을 분석하는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 더욱이 유보통합 시행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수급균형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한 기관 수 감소가 비례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또는 부모 이용선택권 축소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음. 특히, 가정어린이집 감소가 뚜렷하나 일반 국공립, 민간, 법인 어린이집에서도 0~2세 영아보육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음.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이 연구에서 영유아 돌봄서비스는 시간지원, 현금지원, 서비스 지원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OECD Family database에서 다루고 있는 부문을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일가족양립 정책이나 현금수당,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로 구분하여 다뤘던 것을 고려하면 포괄적인 영유아 돌봄체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또한 과거의 연구들이 최근의 정책 변화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부모급여의 도입, 육아휴직의 확대, 유보통합 등의 정책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이 있음.

- 보육사각지대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는 시급함.
- 현재 어린이집은 낮은 정원률로 보육에 필수적인 재원 확보 문제 심각(국공립 86.1%/민간(가정) 79.%/사회복지법인 53%)
- 특히, 농어촌 지역의 보육사각지대 증가가 우려됨(농어촌에 56%(사회복지법인), 46%(법인단체등)/20인 미만 시설이 전체 25%, 휴, 폐원 증가 추세)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본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가구 대상 조사와 서비스 공급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전문가조사, 해외 출장을 계획하는 방법은 적절함. 다만,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연령별, 지역 특성별, 서비스 유형별 수급불균형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이 연구에서 수급불균형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동연구진으로 제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도 활용하고 연구계획서에 언급한 부처 공식 통계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급불균형을 보는 데 한계가 있음. 최근에는 유보통합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기도 함.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이 연구의 제목과 돌봄체계의 3요소 간 괴리가 일부 발생함. 예를 들어, 영유아돌봄서비스는 시간지원, 현금지원, 서비스 지원으로 구분했는데, 실제로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서비스 지원에 해당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만 포함하고 있음. 그렇

다면 제목을 변경하거나 다른 영유아돌봄에 대해서도 수급 불균형을 볼 필요가 있음.

-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면, 국내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전반을 살펴본 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급현황과 공급 체계, 불균형의 원인을 살펴보는 이유가 잘 설명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본 연구는 가족정책의 세 가지 분야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연령별, 지역특성별, 서비스 유형별 불균형을 측정함으로써 국제비교가능한 수준의 ‘한국의 가족정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특히 최근의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연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도가 있음.
- (정책활용 가능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대책 전반을 재검토하면서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통합과 영아에 대한 어린이집 공급 부족, 육아휴직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보육서비스 이용권과 선택권 보장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추가의견

- 시설이용 용어보다는 기관이용 용어가 적절함.
- 수요변화 추계에 대한 방법론 적극 논의 필요함.

○ 반영 계획

- 연구의 정책대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양육지원전반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기관(서비스)의 수급불균형에 초점을 둔다는 점을 보다 명료하게 기술하도록 하겠음.

- 정책변화를 반영함에 있어서 당초 기술된 부모급여, 육아휴직 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유보통합에 따른 내용도 고려하여 정책 변화에 따른 수요변화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관련 통계자료 획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 연구기관 과 면밀히 협조하며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유보통합 공시 자료 등도 활용하도록 하겠음.
- 가정어린이집 폐원상황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정도를 고려하여 기관감소 실태를 분석하도록 하겠음.
- 영유아 감소가 비례적으로 서비스 또는 부모 이용 선택권 축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여 실태를 진단하도록 하겠음.
- 수급불균형을 검토함에 있어서 보육사각지대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포함하도록 하겠음.
- 기관이용으로 용어 수정하여 활용하고, 수요변화 추계 방법에 대한 외부자문 예정

□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 연금자산 분석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연금자산 등 연금 수급권 보장의 실태(미래)를 진단(전망)하고,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정책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로서 의의가 있음.
- 고령화 사회 이슈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시의성이 매우 높으며, 최근의 연금개혁 논의와 더불어 매우 필요하고 목적이 분명함.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연금 가입/수급 실태를 분석함과 함께 1) 정년연장, 고령자계 속고용장려금/고용지원금 등의 노동시장정책과 2)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조정 같은 연금정책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 본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예상되는 정책변화(정년연장, 가입연령 상향 등)를 고려하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 OLG 모형 등에 의한 경제학적인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의 방향 또는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임.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패널자료 분석 등 다양한 접근이 시도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의 활용 가능성(예, 국민노후보장패널과 국민연금 DB 연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국민노후보장패널 활용시에는 세대별 분석시에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포괄적 연금통계 자료를 활용가능하다면 정책적 방향 제안에 보다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 미국 사회보장청의 Leimer 의 연구 자료가 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함.
- 분석 과정에서 ‘장수리스크’의 고려 방식, 사망률(기대여명) 자료의 선택(통계청 혹은 별도 추정) 등이 확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소득대체율, 수익비 등 기존 연금 수급권 관련 측정치들에 비해 이 연구가 검토하는 연금자산 분석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면 이 연구의 의의가 돋보일 것으로 보임.
- 연금자산 추정이 이 연구에서 어떠한 의미(특히 고령화 관련)를 갖는지가 명확해 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른 조건이 고정된 상태에서, DC 방식의 연금에서는 사망률 감소(기대여명 증가)가 노후소득보장 적정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같은 DB 방식에서 기대여명 증가는 총 연금자산의 증가로 이어짐(재정 불안정은 별개의 문제). 급여 연동 방식(예, 물가)으로 인한 급여액 변동을 제외한다면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는 고령화(기대여명 증가)가 ‘총 연금자산’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음. 노후소득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연금자산 분석을 통해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선행연구 부분에서 소개된 경제학적인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거시적인 분석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구체적인 분석 결과들을 그러한 거시적인 분석 결과들과 연결시켜 관련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면 보다 풍부한 연구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을 듯함.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기대연금자산 측정 방식 등 연금 수급권 측정 방법론 측면에서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함. 고령화에 따른 적정 노후소득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안할 수 있다

면 학술적으로 매우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 (정책활용 가능성): 인구 고령화로 적정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1) 노동시장정책(정년연장,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고용지원금)과 2) 연금정책(가입 상한 연령 조정)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 강화 측면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기존에도 관련 연구결과가 존재하지만 최근의 연금 개혁 이슈와 더불어 정책적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함.

○ 추가의견

- 본 과제를 인구단에서 진행하다보니 이게 또 연금 전문가분들의 코멘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함. 다만, 연금 전문가들과 향후 논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 연금자산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분석 개념으로 적절한가 궁금함. 공적연구 관점에서 연금자산이 개인가입자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 필요
 - 소득대체율로 여겨지는 게 충분히 적절한지? 혹은 노후소득으로서 나름대로 가동될 수 있는데, 자산으로 보는 관점이 적절한지 궁금함.
- 연구의 의의는 소득분위별 혹은 세대별 소득대체율의 변화 혹은 급여 수준의 변화로 인한 차이를 볼 수 있음.
- 가능하다면 부제를 추가하여 공적연금 중심의 연구의 범주를 정하고, 향후 내용을 확장시킬거라는 여지 혹은 계획을 본문이나 서두, 혹은 결말에 작성하면 좋을 듯함.

○ 반영 계획

- 국민노후보장패널 등 자료는 50세 미만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공단내부자료와 연계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지 협의 중임.
- 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는 COVID 19 등으로 기준연도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이전 장래인구추계에 비해 기대여명이 감소한 바 있음. 또한 통계청의 사망률은 100세가 상한연령인데 이를 120세 등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통계청의 사망률 추정방식을 토대로 120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외부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의견대로 분석을 위해서는 어떤 사망률을 반영할지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120세 연장 등 공동연구결과를 보면서 검토하겠음.
- 의견 주신 대로 보고서에서 기대연금자산의 개념, 분석의 의의, 기존의 소득대체율과 수익비 등 기존의 평가지표와의 차별성 등을 설명하는 절을 별도로 작성할 계획임.
- 워크숍 자료의 선행연구가 OLG 등 경제학적으로 접근한 논문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보고서의 선행연구에서는 의견주신 대로 주요연구내용인 연금자산 등 기대생애소득 분석에 대해 Leimer 등 연구사례를 추가하여 살펴볼 계획임.
- 50세 미만 중년층에 대한 자료부족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을 활용할 때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임. 제안하신대로 통계청의 포괄적 연금통계 자료도 함께 활용하여 보완하겠음.
-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금 등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인데, 초기에 연구내용과 계획에 대해 연금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겠음.

-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소득대체율로 평가할 수 있음. 연금 자산은 소득활동이력이나 생애소득 등을 분석하여 사회보험료 등 기여를 고려하여 세대간·세대내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급여의 적절성과 함께 부담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소득대체율 개념도 국제기구나 분석목적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고, 소득이력 등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연금자산 분석을 통해 지표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임.
- 연금자산은 공적연금과 함께 사적연금을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단년도 과제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만 고려하더라도 출생 코호트별로 생애소득과 연금수급이력 DB를 구축하는데 연구기간이나 개인정보보안 등 한계가 있음. 사적연금으로의 확대는 소득과 수급이력 DB를 확대구축해야하므로 향후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적연금으로 확대하여 26년 '생애주기를 반영한 공·사적 연금자산 분석(안)'을 후속과제로 진행할 계획임.
- 연구의 범주를 고려하여 부제를 추가하거나 과제명 변경을 검토하겠음.

□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의 의약품 사용 지원방안 연구 -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인구고령화가 급속화되는 시점에서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함께 복약관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재가노인에 대한 의약품 사용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노인의 특성상 복합만성질환의 유병률 증가, 그에 따른 복용의약품증가에 따른 약물관련문제 증가가 대두되고 있음. WHO에서 약물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약사역할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특히 약물관련문제의 조기차단에 대한 약사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이에 따라 약물사용에 대한 약사의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제도화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사업체계의 미비로 성과도 충분하지 못함.
- 외국의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으로 국내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 연구는 매우 의미있으며, 2/29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통과되었고, 여기에 약사가 약국 및 돌봄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더욱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사료됨.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노인 의약품 사용의 문제점이나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졌으나, 이들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성과를 기초로 노인특성별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는 없었음.
- 지금까지 복합만성질환 노인에 대한 의약품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지역사회나 재가 노인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의 차별성이 있음.
-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전체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접

근하기 보다는 주거형태나 사회적자원 보유여부에 따른 취약 집단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일본 사례 연구에서 일본의 재택의료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재택복약지도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방문건강관리 담당자 외 재택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료인에 대한 인터뷰는 재가 노인의 복약실태 파악에 도움이 될 것임.
- 지역적특성, 환자특성(인지력수준, 거동가능여부, 독거여부, 약물복용정도) 등 고려한 다양한 지원모델에 대한 제안이 기대됨.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행태가 달라 지역특성별 적합모형에 대한 고려도 필요.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 다양한 사업에 참여했던 담당자 및 약사들에 대한 면담이 필요함.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본 연구의 제목 중 의약품 지원은 의약품의 안전성은 물론 접근성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구체적인 연구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처방약 외에 일반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함.
- 노인 약물에 대한 정보연계 필요성에 대한 제언이 필요함. 특히, 농촌 거주 재가 노인의 경우 기저질환과 급성기 치료를 위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품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약품 처방 정보의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연구내용의 포괄성이나 목차구성은 적정함. 단 환자의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약국방문형 지원관리방안도 포괄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반영 계획

- 연구 범위는 일반의약품을 포함하지 않고, 처방약의 다제약물 복용 위주로 진행할 예정임. 분석 및 제언 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필요성을 검토하여 포함하겠음.
- 커뮤니티케어 및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모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겠음. 환자의 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약국방문형 지원관리방안 등을 포괄하여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성과 향상을 고려한 사회보험의 정책방향 모색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제목이 보여주는 연구의 최종 목적인 “사회보험의 정책방향”에서 ‘사회보험’은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연구진이 초점을 둔 제도를 부제 등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의 중요한 가치이자 차별점은 건강보험과 공적연금이라는 상이한 목적과 작동기제를 가진 제도를 하나의 틀에서 분석하는 것에 있음. 다만, 이러한 차별성이 결국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연구진이 defence해야 할 지점이라는 것 역시 유념되어야 함.

- 따라서 건강보험과 공적연금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연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1)우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이론적 틀을 검토하고 2)시작단계에서 연구진이 나름대로 염두에 두는 방향성을 설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건강보험 DB와 보사연이 기존에 구축한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계획하고 있음. 우려되는 것은 사용 자료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임. 건강보험 DB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지출이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까하는 우려가 있음. 건강보험 DB가 포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기대수명에 대한 영향을 추정할 수 있을 만큼 긴 기간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대안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 지출이 사회경제집단별 연령별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대수명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함.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연구 내용 구성시 최종적인 결과물을 부각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겠음. MSM에 미비했던 건강보험 모듈을 구축하는 것의 의미도 작지 않을 것이며, 공적연금 영역에서의 정책적 함의 도출과 아울러 공적연금 개혁에 도움이 되는 ‘건강보험 영역의 변화 지점’도 제안해 준다면 본 연구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결과물이 되리라 사료됨.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기존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강보험지출이 기대수명 증가를 통해 건강보험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환원 구조를 분석하는 면에서 학술적 기여가 기대됨. 특히 건강보험지출 증가가 건강상태 나아가 기대수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함.
- (정책활용 가능성) 향후 사회보험 제도 개편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우려되는 부분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혹은 건강보험 가입률 제고)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여 의미 있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다수 있다는 것임. 이 연구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얻는다면 그 자체로 큰 학술적 의미가 있으나, 정책당국과 납세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추가의견

- 건강보험과 연금은 시계열이 완전히 다른데, 단기 보험과 장기 보험의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 분석하는지 의문임.
- 연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으로 보임. 전체 골격은 단순한 것으로 보이나, 연구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됨. 연구 진행에 앞서 연구에 대한 흐름도를 작성한 후에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반영 계획

- 현재 계획 상으로는 세대간 모형 설정과 MSM시뮬레이션을 통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각 제도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과 공적연금의 재정적 성과 및 국민 건강 차원의 성과를 함께 고려한 정책적 합의 혹은 그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하겠음.
- 의료비 지출의 성과나 개인별 기대수명의 차이 분석 시에는 소득과 건강수준 간의 내생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이에 강건한 추정방법론을 설정할 계획임.
- 연구 진행에 있어 기본적인 모형을 세팅하고 이후에 요소들을 조정하며 진행할 예정이며, 기본적인 흐름과 연구내용을 도식화하여 구체적 과업들을 일정별, 단계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음.

□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변동에 대응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요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외 정책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함. 특히 저출산 고령화 대응 선형 국가로서의 독일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함.
- 독일 사례는 지속되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독일 인구정책 검토에 대한 필요성과 연구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였음.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대부분의 관련 선행연구는 독일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에 대한 개별적 제도 소개 수준으로 수행되었고 인구정책 전반을 역사적이고 맥락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분석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독일의 인구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다학제적, 융합적 접근은 미흡한 수준임. 따라서 인구정책의 변화 과정과 배경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됨.
- 본 연구는 독일의 인구정책 및 인구전략을 통합적인 맥락에서 검토하고 국민인식조사를 수행하여 인식과 사회문화 역동까지 검토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어 있음.
- 독일 인구전략이 인구구조 변화에 사회구조를 최적화시키는 구조조정에도 방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면 보다 차별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독일의 인구현황과 전망 관련 공식 통계자료와 독일 인구정책과 인구전략 관련 정책 문건을 검토하고 현지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독일인의 인구변화 및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는 연구의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문헌연구의 중요성이 큰 연구이므로 여러 통로를 통해 다양한 최신 정책 문건을 취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국민인식조사 시 독일 인구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본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화적 민감성을 가지고 설문문항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전체적으로 독일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인구 현황, 인구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배경 등을 포함한 목차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짐.
- 서론에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1장 2절로 구성된 독일 인구 현황과 전망을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살펴본다면 연구 내용이 보다 포괄적일 것으로 보임.
- 2장 배경과 전개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 기업 등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제시한다면 한국의 인구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클 것으로 생각됨.
- 인구정책에서 정책 변화의 경과뿐만 아니라 정책 전환의 동력이나 정책담론 변화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함.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국가비교 연구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학술적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독일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독일 사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기여
- (정책활용 가능성) 독일 인구정책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책 마련에 기여.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의 수립 시 기초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반영 계획

- 독일 인구현황 전망을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연방주별 인구정책 분석을 추가하여 구서독-구동독지역과 남북간 지역차이를 자세하게 제시하겠음.
- 국내외 최신 문건과 통계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고, 현지 전문가 자문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음.
- 기획연구로서의 일관성과 개별 국가의 특수성이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국민인식조사 시행여부, 표집방법, 문항구성 등을 연구진과 상의하겠음.
- 서론에 연구내용 및 방법을 서술하는 절을 추가하겠음.
- 정책 수립 및 전환 배경과 그 경과에 이르는 일련의 흐름을 자세하게 서술함으로써 국내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변동에 대응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요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외 정책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함. 특히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문화적인 맥락에서 유사한 점이 있는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적절함.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에서는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대응정책에 관해 일부

만을 분절적으로 제도 소개의 수준에서 살펴보았거나 정책적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비해 최근 정책을 포함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음. 본 연구는 일본의 인구 변동과 정책, 일본인의 인식까지 살펴봄으로써 일본 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일본의 인구정책 흐름에 대한 파악뿐 아니라 그간 정책의 효과성 평가 제시 및 인식조사까지 수행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포괄성을 넓히고, 보다 풍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타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됨.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일본의 인구 통계자료 검토를 통한 인구 변동 모니터링과 현지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일본인의 인식을 파악하는 연구의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일본과 한국의 인구통계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양 국가의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일본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고찰과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한국 및 일본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사회적 인식의 차이점까지 비교하고 있어, 연구 내용이 풍부하고 포괄적이며, 이 같은 흐름의 목차 구성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됨.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맥락적 상황이 있고 오랜 시간 인구정책을 추진한 만큼 살펴보아야 할 정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저출산 정책 내에서도 엔젤플랜, 신엔젤플랜, 소자화대책으로 이어지는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

업, 자녀·육아 응원 플랜,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등 의미있는 세부 정책을 살펴보고,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단체, 기업의 행동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배경과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일본의 인구정책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국가 비교 연구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학술적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정책활용 가능성)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의 수립 시 기초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추가의견

- 차별성 확보 방안 고민
- 동 과제 외 3개국 국가와의 공통된 문제의식 및 framework가 필요
- 영역 포괄성(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고민 필요

○ 반영 계획

- 90년대부터 본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본의 인구정책을 빠짐없이 검토하고자 함.
-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검토도 수행하고자 함.
-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수행하고자 함.
- 일본의 저출산 예산 규모 등 재정적 측면을 검토하고자 함.
- 타국(스웨덴, 프랑스, 독일) 연구를 담당하고 계신 연구책임자들과 논의할 계획임.

□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이 연구는 프랑스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시의 적절한 연구목적を 제시하고 있음. 프랑스는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을 실시한 국가로 알려져 있어 보육, 교육, 일과 생활 균형 정책 개별 영역에서 벤치마크를 위한 비교연구가 진행됨.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은 개별 영역에서의 정책변화만으로는 어려운 영역이므로 큰 틀에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접근의 연구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정책 수립에 있어서, 한국의 현실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국외사례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유용함.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 연구와 달리 특정 영역에서 사례 연구 국가의 정책을 탐색하기보다 인구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영역의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을 아우르는 연구를 함으로써 차별성이 있음.
- 국외 사례를 정리한 연구들이 적지 않지만, 특정한 프로그램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의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이 연구는 프랑스의 인구정책을 통시적,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됨.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프랑스의 인구학적 변화 파악을 위한 통계데이터 접근이나 해당 국가 국민의 정책에 대한 인식연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해당 분야의 적절한 전문가를 섭외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연구 제목과 목적에 맞게 목차 구성이 됨.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통시적인 접근은 한국의 여건과 가장 유사한 시기와 구체적인 정책수립 배경과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정책에 대한 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추가의견

- 연구 제목에 있어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해당 부분을 인구정책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 4개 국가의 인식조사를 어떤 틀을 가지고 논의할 것인지 추가적 검토가 요구됨.

○ 반영 계획

- 프랑스어에 능통하며 프랑스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적절한 전문가를 섭외하여 통계현황이나 정책변화과정에 대한 서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전문가와 협업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 주요 장(chapter)을 구성할 때 한국 상황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할 계획임. 통시적으로 프랑스 인구정책의 수립 배경 등 변

화과정을 기술할 예정임.

- 연구 제목을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에서 “인구정책”으로 변경하겠음. 4개국의 연구책임자가 조율하여 비교가능한 조사의 범주를 고려하겠음.

□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특정 국가사례, 특히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에서 성공적 경험을 한 국가사례연구는 국가의 정책을 환경과 정책구조 등 종합적인 분석과 시사점을 얻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함.
- 단편적 정책의 도입과 수용의 위험을 줄이고 정책환경을 고려한 정책구상과 평가에 사례 분석은 의미를 지니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연구의 목적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사회보장제도 및 이민정책, 노동정책 등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인구정책과도 연계되어 스웨덴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왔는가 하는 질문은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임.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인구정책, 일 가정 양립정책, 여성 고용정책 등을 개별적으로 연구해 온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는 인구, 이민, 가족 및 노동 정책분야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데 차별성이 있음.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연구 자체의 구상에서 확보되기보다 연구의 내용을 실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시사점을 얼마나 체

계적으로 도출하는지에 따라 상이할 것임. 종합적 이해와 시사점이 도출되도록 한다면 즉 사례국가에 대하여 제대로된 이해를 제공한다면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판단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스웨덴 사례를 최근 시점으로 한정하여 본다면 정책적 시사점이 한정적일 수 있음. 1940년대부터 저출산 고령화정책을 기획 추진한 사안을 고려하여 통시적으로 고찰할 필요.
- 한편 정책도 주거, 고용, 돌봄 등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괄할 필요. 생활의 안정성을 국가가 어떻게 확보하여 왔는지 보는데 초점을 두는 것도 관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
- 설문조사의 경우 기존의 설문조사를 활용하고 이후 기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함.
- 스웨덴 시민들의 인구 문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을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 분석하는 설문조사 연구의 중요성 및 타당성이 더 정확하게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연구내용의 포괄성은 크게 문제가 없어보임. 실제 내용에서 어떻게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내는지에 대한 고민 구체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이민정책의 경우 이민정책의 효과뿐 아니라 부작용과 그 부담이 빚어낸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고려도 함께 고찰할 필요
- 여러 관련 제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할 때 정확히 어떤 차원에서 제도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사례국가의 정리가 체계를 갖추도록 진행되고 관련요인의 포괄성이 확보되면서도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된다면 학술적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 특정 수당 혹은 사회서비스, 휴직제도 등 개별적인 제도나 정책수단이 아닌, 스웨덴의 인구정책 및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총체적으로 정의하고 기술할 수 있는 정책담론 차원에서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기대함.
- (정책활용 가능성) 스웨덴 국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통시적으로 각 요인의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다면 정책구상에서 연구내용이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봄. 포괄적인 정책 패러다임을 역사적, 맥락적 관점에서 도출하는 본 연구의 성격을 감안하면, 단순히 개별 제도를 모방하는 차원에서의 정책 활용보다는 한국의 사회적 맥락에 맞는 대안을 구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논의를 위한 연구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함. 특히 한국에서 저출산 관련 논의에서 일 가정 양립 등의 문제가 거론될 때 전반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관점이 부재한 가운데, 본 연구는 노동시장정책도 포함하여 스웨덴의 인구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정책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함.

○ 반영 계획

-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스웨덴 정책 사례를 분석하도록 하겠음. 또한 한국에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스웨덴과 한국의 제도 맥락 차이를 파악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겠음.

- 스웨덴의 관련 정책 변화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분석하겠음. 가족정책뿐 아니라 주택정책, 노동시장정책 등까지 폭넓게 조사하여 개인의 안정적인 생활 확보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분석하겠음.
- 설문조사의 경우, 이용 가능한 기존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타국가 연구책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음.
- 스웨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민정책 또한 연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겠음.
- 스웨덴과 한국의 비교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연구질문과 가설을 수립하고, 그 목적에 따라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겠음. 설문조사 샘플 수를 각 국가별로 2천 명 이상으로 설정하고, 연령, 지역, 학력 등에 따라 층화표본추출을 통해 샘플을 구성하겠음.
- 제도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이론 검토 단계에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겠음.
- 단순한 제도와 정책의 나열적 소개에 그치지 않고, 스웨덴과 한국의 정책 특성과 설계를 구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국내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과 담론 전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만약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방향성도 제시하겠음.

제3절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세부과제 요약

□ 인구와 기후변화: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이 연구는 인구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주요 영역 중의 하나인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인구학적 이슈와 대응 과제를 살펴봄. 인구와 기후 변화 간에 존재하는 광범위하고도 복잡한 상호적 관계를 고려하여 인구-기후변화에 관한 연구의 분석 틀과 발전 과정, 기후변화의 현재와 미래 전망, 인구와 기후변화의 상호 관계와 주요 이슈, 인구와 기후변화 관련 대응 과제를 모두 아울러 인구와 기후변화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 연구 결과

- 첫째, 인구와 기후변화의 관계에 관한 개념적인 분석 틀과 환경 이슈를 둘러싼 인구학적 논의의 발전 과정임. 인구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본 틀을 구성하고 인구와 기후변화의 상호적 관계 그리고 발전, 과학-기술, 제도-정책, 문화 등 이러한 관계를 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봄. 또한 환경 이슈에 관한 인구학적 연구의 역사 및 최근까지의 인구학적 연구에서 환경 이슈가 주요 주제로 자리 잡지 못한 배경을 검토함.
- 둘째, 인구와 기후변화 논의의 기초가 되는 기후변화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살펴봄. 특히 기후변화의 전망은 장기적 안목에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정책의 기초가 됨. 세부적으로 지구의 표면 온도 변화, 해양 열용량 변화 등 지구 온난화의 주요 근거

와 기후변화에서 인간 활동의 영향력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였음. 또한 기후변화의 과거와 함께 기후 모델의 기초 및 기후변화 전망 시나리오 등 기후변화의 미래 전망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살펴봄.

- 셋째, 인구와 기후변화의 상호적 관계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음. 현실에서 인구와 기후변화의 관계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다양한 매개 및 조절 요인이 개입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임. 이 연구에서는 인구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가 인구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영향의 세부적 내용과 작동 기제 및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였음. 또한 현재까지 기후변화가 출산, 사망,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인 정리와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와 인구 동태’를 별도의 절에서 검토하였음.
- 넷째, 인구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 과제임. 인구-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기후변화 대응 과제를 논의하였음.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지속 가능한 발전, 재난 위험, 환경 오염 등과 밀접히 연관된 이슈라는 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에서는 ‘특화된’ 접근 대신에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구추계 등 기후변화 전망의 인구학적 기초를 다지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인구통계의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기반 강화 방안을 검토하였음.

○ 결론 및 시사점

- 인구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는 공감대가 높고 논란이 적은 지점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에서도 인간 개발과 재생산권 보장이 핵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구정책을 다른 이슈들과 구분하여 별개로 추진하는 대신에 인구와 기후변화의 문제를 ‘발전’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장래가구추계 모형 구축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급속한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각종 보건·복지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1인가구와 노인가구의 증가는 주거, 의료,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정책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재정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구구조 변화를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인구추계모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보다 신뢰성 있고 정합성 높은 가구추계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 주요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됨. 첫째, 국내외 가구추계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음. 가구주율법, 개인 특성법, 가구전이율법 등 다양한 방법론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혼인상태를 고려한 가구주율법이 가장 적합함을 확인하였음.
- 둘째,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에 기반한 모듈화된 가구추계모형을 구축하였음. 본 모형은 ① 혼인상태별 인구추계 모듈, ② 가구주율 추계 모듈, ③ 가구원수 및 가구유형별 구성 추계 모듈

로 구성됨. 각 모듈은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향후 방법론 개선이나 데이터 갱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

- 셋째, 구축된 모형의 신뢰성을 통계청 추계결과와 비교 검증하였음. 가구 수는 2042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평균 가구원 수는 2022년 2명 초반에서 2052년 1명 후반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1인가구와 부부가구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통계청의 전망과 유사한 방향성을 확인하였음.

○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첫째, 보건·복지 정책연구에 직접 활용 가능한 가구추계모형을 구축했음. 특히 혼인상태별 인구추계와 가구유형별 모듈화를 통해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음. 둘째, 모듈화된 구조로 정책 변화나 사회적 변화가 가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시의성 있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음. 셋째, 등록센서스 활용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한 동적 가구추계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 다만, 기초데이터의 한계, 수정지수모형의 한계, 오차의 누적 문제 등이 향후 개선과제로 남아있음. 이를 위해 등록센서스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모형으로의 확장, 시계열 모형의 고도화, 정책 시뮬레이션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할 것임.

□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사회는 특히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이 다각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속적이고 고착화된 저출산,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에 인구 변동과 사회 위험 간 연관성, 다양한 영역(지역 간, 세대 간, 사회계층 간, 노동시장 및 산업 구조 내 등)에서의 삶의 질 격차 모니터링과 정책 대응 개선이 필요함.
- 아울러, 인구 변동 대응 정책 추진 체계(거버넌스 등) 개편과 법, 제도, 인프라 개선도 함께 요구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사회적 위험과 맞물린 불평등 특성과 저출산 간 연관성에 대한 개연성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가 지속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노동시장 격차(대기업-중소기업, 이중구조에 따른 정규직-비정규직 등), 교육 수준 격차(고학력-저학력, 대학서열 등), 정치 성향 격차에 따른 이념 갈등 등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사회경제적 변화와 여러 사회정책 분야의 다차원적 불평등과 맞물린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격차(간극), 동일 세대 내에서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바로 그것임. 이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특성은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동시에 향후 미래의 인구 변화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변화 전망에 대한 주된 요인으로서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심층적 논의 및 진단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다차원적으로 전개, 심화되는 대전환 시대에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 체계의 개편과

정책 개선 방향 모색이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다분함. 특히,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사회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세대 간 불평등의 특성을 집중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 개선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이는 저출산 양상을 포함한 제반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이 중장기적 시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본래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저출산 양상 진단 및 해석,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보다 정교하게 도출하기 위하여 미시적 층위에서의 세대 간 불평등 특성이 출산 행위(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 관련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 내용

- 세대 불평등이 학술적으로, 사회과학 제 분야에서 두루 주목하고 있는 주된 현안이자 쟁점으로서의 큰 의미를 띠고 있음과 동시에 정책 당국에서도 주된 현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축적되어 있음. 다만, 이러한 양적 축적과 별개로 이들 연구 사례의 논의는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대 내 및 세대 간 불평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세대 불평등의 통시적 경향은 점차 완화되었거나 큰 변화 없이 심화되지 않았다는 논의, 그리고 대체적으로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논의가 바로 그것임. 반면, 세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관련 사례의 주된 논거는 386세대 등과 같이 특정 출생코호트의 부의 집중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특성을 진단하고, 세대 간 자산 이전에 따른 세대 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인구변천에서 높은 출산율이 낮은 출산율로 전환되는 과정은 구조적인 불평등에 따른 차별 출산력과 사고와 행위의 상대적 변화인 확산(diffusion process)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음. 전자는 주로 경제학적 설명이 활용되고, 후자는 주로 사회적 및 인류학적 관점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있음. 한 사회 내 계층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교육,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출산력도 유지될 것임. 반면 전근대사회에서 효과적인 출산 조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계층 간 출산율 차이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임. 이 경우 출산율 차이는 사회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고와 행위를 수용하는 시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장하는 현상이며, 새로운 사고와 행위가 사회 전체로 확산될 경우 사라지게 됨. 혁신의 수용과 전파 과정에서 이른바 선도(leaders) 집단과 추종(followers) 집단이 발생하며 상대적인 출산율 차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됨.
-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적 관점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논쟁과 수정을 통해 발전해 왔음. 어떤 이론이 다른 이론과 명확하게 대립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부분적으로 대립 및 보완하며 발전해 오고 있음. 여기에서는 제2차 인구변천 이론, 템포효과, 성평등주의와 젠더혁명 관점, 불확실성 논의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함.
- 청년층이 인식하는 불평등은 혼인, 출산 등 그들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특히 사회계층과 구조적 요인에 따라 불평등에 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혼인과 출산을 포함한 개인 행위 역시 차별적인 모습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큼. 불

평등 수준과 불평등에 관한 청년층의 인식이 실제 혼인과 출산 등 개인의 선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책적 개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추가되는 것을 의미함. 불평등과 불안정성은 한국 사회의 인구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여겨짐. 불평등과 불안정성이 출산 등 인구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과 종합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구됨.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조건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청년층이 안정된 경제적 조건과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최근 세대 간 소득, 자산 불평등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인 세대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완화되었지만, 세대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특성은 청년층의 상대적, 절대적 취약성과 맞물려 그 의미가 배가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렇게 배가된 특성이 이들의 결혼 및 출산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일련의 연쇄적 과정의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청년층의 상대적 취약성은 통시적 관점에서 관측되는 출생코호트 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과거 청년층과 다른 취약한 특성을 의미함.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구조적 양극화의 심화에 의한 결과적 양상에 주목하고자 함. 다음으로 절대적 취약성은 이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연령층과 두드러지게 다른 특성에 따라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컨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들의 주거 유형은 상대적으로 전월세 비율이 높으므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고 이에 따라 개인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임. 이들의 상대적, 절대적 취약성은 그 자체로도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이지만, 이에 더하여 이로 인한 경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생애주기 사건 이행, 가령 결혼, 출산 등의 사건 이행과 부정(-) 연관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

- 세대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 현황 및 세대 내 불평등과 미혼자의 결혼·출산 특성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청년층 내부에서 소득, 근로조건, 자산과 주거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과 교육 등 사회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음. 다만 간극이 클 것이라 예상한 정치성향과 젠더갈등의 경우에는 그 인식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하지만 최근 이루어진 일부 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크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음. 미혼자의 결혼과 출산의 선택은 개인이 가진 자원과 개인이 위치해 있는 자리에서 결정됨. 전반적으로 결혼과 출산 의향이 하락하는 추세에 더불어 미혼자 내부에서도 사회경제적 차이 혹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 의향은 더 차이를 보이게 됨. 문제는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에서 나타나는 격차가 중첩될 경우 최종적으로는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임.
- 세대 간, 세대 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차이 분석 결과 드러나는 최근 젊은 층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강한 개인주의적

성향과 더불어 정책 추진 환경에 대한 높지 않은 신뢰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불안정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맞물린 내, 외적 취약성의 결과적 양상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존재함. 세대 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관은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1) 결혼에 대한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본인의 경제적 여건이 결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 2) 출산에 대한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정의 경제적 여건 및 본인 및 배우자의 직업이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 3) 전통적인 자녀의 순기능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자녀를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요컨대, 최근 세대는 상대적으로 기성세대에 비하여 결혼, 출산, 자녀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 정도가 낮으며, 1981년 이후 출생 집단 내에서도 최근 코호트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되는 1960년대생과 1990년대생의 노동시장 경험을 인접 출생 코호트와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노동시장 결합 지위 이동으로 본 세대 간 불평등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주요 분석결과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첫째, 1960년대 남성의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는 1950년대생보다는 1970년대생보다 낮는데,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둘째, 1990년대생 남성의 20대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는 이전 세대보다 낮아진 반면 1990년대생 여성은 이전 출생 코호

트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음. 단,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출생 코호트의 교육수준이 이전 세대보다 향상되었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임. 셋째, 확률효과 다항로지 분석은 대체로 기술통계 분석결과와 일치함. 즉, 1960년대생이 다른 출생 코호트보다 높은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경험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1990년대생들의 경험은 이전 세대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가족형성 주기 변화가 노동시장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출생 코호트 간 변화에는 차이가 발견되고 있음.

- 한국노동패널 원시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먼저, 해당 분석대상으로 25-49세 기혼 취업 여성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소위 ‘불평등’을 느끼는 의 주체가 어떤 집단인지 구체화할 필요성을 인식한데 기인하고 있음. ‘청년’의 어려움, 청년들이 느끼는 불평등이 상당함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들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띠기 때문임. 즉, 이들은 사회적 유급 근로 이외에도 가사노동 등 다각적인 부담과 더불어 출산 이행과 직, 간접적으로 맞물린 사회경제적 불평등 특성을 체감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도출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즉, 분석대상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횡단적 측면의 분석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 중 하나는 2000년의 경우 두 집단 간 출생아 수 평균에 대한 소득, 자산, 가치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보다는 연령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보다 기인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2021년도의 경우에는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취업 여부, 상대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차이 설명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임.

○ 결론 및 시사점

- 출생코호트별 출산 이행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간 연관성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본 연구의 제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정책적 개선 방향은 프로그램,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에 더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개선을 위한 거시구조적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의 잠재적 수요자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러한 방향은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전국민적 역량 결집과 맞물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간의 부분균형적 측면(partial equilibrium)에서의 접근을 지양하고, 일반균형적 접근(general equilibrium)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음. 다각적인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등 사회적 양극화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여러 사업의 추진의 실효성이 저해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임.
- 또한, 청년들에게 현재의 저출산 문제의 짐을 고스란히 넘기거나 책임 소재를 전가하는 느낌으로의 정책 수립은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음. 연령효과와는 상이한 코호트효과 측면에서 이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

단됨. 과거의 청년층과는 다른 현재의 청년층이 경험하고 마주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이러한 상황과 맞물린 이들의 여건과 특성이 어떠한지, 이들 중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없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절실함. 관련하여, 현재의 저출산 대응 정책 수립과 설계가 모든 잠재적 정책 수혜자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반영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수준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제시되고 공개될 필요가 있음. 가령, 젊은층과의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의 결과 내지는 설문조사 결과가 충실하게 반영된다면 보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 대응 방향이 가능할 것으로 봄. 정책의 안정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시계와 안목 등을 고민할 겨를도 없이 현재의 저출산 대응은 상당히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현재 청년층의 고민과 내, 외적 취약성을 더 많이 고민하고 특히 자녀 출산을 원하지만 내, 외적 여건의 한계로 이행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고민과 미시적인 정책 설계가 더욱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청년 이행경로 변화의 파급효과와 인구사회정책적 함의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20년 「청년기본법」제정과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출발점으로 기존의 고용정책에 한정되어 있던 청년정책이 종합적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은 확대일로에 있음. 동 법과 기본계획이 청년의 시민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만 향후 청

년정책 패러다임 구성에 있어서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연속성과 불안정성 문제, 그리고 청년세대 내 격차 문제에 천착할 필요성이 있음.

- 청년기의 가장 핵심적인 생애 과업은 ‘성인으로의 이행’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생애주기 단계와 구분되는 청년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음. 한편, 과거 (집을 떠나, 학교를 마치고, 일자리를 구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는)성인으로의 이행이 단선적이고 연속적인 사건(event)이었다면, 복잡다기해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행의 과정이 불연속적이고 불안정하게 변화하면서 성인으로의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도 크게 늘고 있음. 이행의 지연은 미시적으로는 이후 생애과정에 있어서의 곤란(생애소득 손실 등)을, 거시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손실(저출산, 총생산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이행의 지연 현상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점은 오늘날 청년들의 이행이 과거세대와 어떻게 다른지(‘세대론적 관점’)와 청년세대 내에서 이행의 격차가 어떻게 유발되고 진행되는지(‘계층론적 관점’)임.
- 이와 같은 성인으로의 이행의 지연, 이행과정과 결과의 세대·계층 간 격차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짐. 과거 단선적이고 연속적 이행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또는 사회정책)가 오늘날 불연속적이고 불안정한 이행과정을 지원하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찰되는 격차 문제에 대응하는데 여전히 유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기존의 사회정책이 전제하는 생애주기는 아동기, 성인기, 노년기로 크게 구분될 수 있는데,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행기(청년기)를 새로운 생애주기로 공식화하고 이에 대

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최근 10여년 간 대학진학률, 대학졸업 소요기간,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 혼인연령, 출산연령 등 주요 이행 소요기간이 증가하고, 일자리 이행의 조건이 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플랫폼 노동 등 일자리 유형 다양화 등의 환경변화가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19가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충격 발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의 동향을 종합하면 성인으로의 이행경로 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변화상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생애 과정에 대한 영향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생애소득에 국한되거나, 거시적 영향을 다룬 연구는 부재한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본 연구는 이행경로 특성 변화가 개인의 생애사에 미치는 영향과, 거시적 차원의 인구사회경제적 영향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짐. 또한 국제적으로 복지레짐 혹은 자본주의 유형별로 이행 특성 변화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도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짐.
-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짐. 오늘날 청년들의 이행경로의 특성변화가 개인사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 이행과정 변화의 미시적 영향(개인의 생애소득, 신체·정신건강, 가족형성 등)과 거시적 영향(사회보장 분담-수혜구조, 노동시장, 소득·자산불평등, 혼인율 및 출산율 등)을 파악함. 이행경로 변화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정책, 저출산고령화정책(부모급여, 아동수당, 출산 및 양육정책 등), 나아가 사회정책적 함의와 개선방안 제시함

○ 주요 연구 내용

- 이론적으로는 1)교육 이행, 일자리 이행, 가족 이행 변화의 개인사적 영향과 2)교육 이행, 일자리 이행, 가족 이행 변화의 인구사회경제학적 영향에 대해 검토함.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변화의 개인사적 영향으로는 1)생애소득, 노동시장 지위 등의 영향, 2)결혼, 출산 등 가족형성의 영향, 3)건강(신체, 정신), 사회인식 등의 영향이 있으며,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변화의 인구사회경제학적 영향으로는 1)결혼 및 출산 행태 등 인구학적 측면, 2)노동력 공급, 생산성, 경제성장 등 경제적 측면, 3)사회보장비 분담구조 등 사회보장재정적 측면이 있음.
-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변화의 파급효과의 국제비교를 통해 복지레짐(혹은 경제체제) 유형별 파급효과와 우리나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검토하였으며, 청년정책, 저출산고령화정책, 사회보장정책적 함의로는 1)이행기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에의 함의, 2)저출산고령화정책(부모급여, 아동수당, 출산 및 양육 정책 등)에 의 함의, 3)사회보장정책에의 함의가 있음.

○ 결론 및 시사점

- 대학교육의 확대, 노동시장 진입 경쟁 심화, 불안정한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환경 변화로 과거에 비해 변화된 양상을 보이는 청년의 성인이행기 변화가 그들을 부양하는 부모에게 물질적, 비물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살펴보고자 하였음. 청년의 성인이행기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기간이 길어지는 특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동거여부, 경제적 의존 여부, 노동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이행 유

형을 구분하였음.

- 2022년 고령화고용패널 자료에서 조사된 청년 자녀의 특성을 보면,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모와의 동거 비율,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비율도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20~24세 청년을 포함하여 20~34세 청년 자녀를 살펴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부모가 응답한 경우, 대체로 자녀가 학업 중에 있는 비중이 높았고,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대체로 취업하여 상용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았음. 다만, 자녀가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나 동거하고 있는 경우,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자녀의 노동 안정성이 다소 불안정한 경우가 소폭 높게 나타났음. 한편, 전반적으로 자녀가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노동시장 이행을 통해 일차적인 경제적 자립을 이룬 후에도 주거 자립의 준비를 위해 부모와 동거하거나,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로 부모와 동거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청년 이행의 유형을 경제적 의존 여부, 동거 여부, 노동 불안정성 정도를 종합하여 총 5가지로 구분한 후, 청년 자녀의 유형에 따라 부모가 경험하는 물질적, 비물질적 측면에 차이가 있는지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우선, 근로여부, 소득 및 소비 지출, 노후 준비 수준 등의 물질적 측면을 살펴본 결과, 청년 자녀의 5가지 이행 유형별로 소득, 소비지출, 노후준비 수준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청년 자녀 부양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답

하기 어려움. 자 녀가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의존하지 않더라도 동거하는 경우, 교육비, 용돈 등의 생활비 지출이 더 발생하는 것은 관찰되 나, 대체로 이들 가구에서 소득 수준, 미래 예상 월평균 공적연금 수급액이 더 높게 나타나고, 최종학력 수준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모가 어느정도 청년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에 자녀를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한편, 청년 자녀 이행 유형별의 부모가 경험하는 정서적 측면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보면, 대체로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관계에 대한 만족도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년 자녀의 부양이 부모의 정서적 측면에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됨.

- 성인이행기 초기에 부모의 지원이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에서 최대한의 버팀목 기능으로 전환되면서, 부모에게 지원받는 것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보호’받는 것이고 더 나은 노동 안정성 획득 및 보다 나은 주거 자립을 위한 ‘투자적’ 자원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임. 물론, 본 장에서는 청년 이행 변화를 특정 시점에서의 상태를 기준으로 횡단면적으로 살펴봄에 따라, 시간의 누적을 고려한 더욱 정교한 논의를 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존재함.
- 즉, 청년 자녀가 노동 안정성을 획득하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부모가 경험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감은 더 부정적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상태의 지속성(최종학교 졸업 이후 구직기간, 미취업 기간 등)은 고려할 수 없었기에,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돌봄 서비스 수급불균형 분석과 개선방안:
서비스 공급체계를 중심으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2013년에 미취학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의 수요와 공급이 한동안 급증하였음. 최근 저출생에 따른 급격한 아동 수 감소로 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급감하고 있으며,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관련 시설은 빠르게 폐원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 이는 지역에 따라 돌봄 인프라 사각지대를 확대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음. 그뿐만 아니라 2022년에 부모육아휴직제도(시간지원제도), 2023년 부모급여(현금지원제도)가 도입되는 등 양육지원을 둘러싼 큰 정책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저출생에 따른 아동 수의 급격한 감소와 관련 정책의 변화는 돌봄서비스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본 연구는 정책 변화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수요 변화와 공급 구조를 기관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 결과

- 정원충족률을 기준으로 수급을 분석한 결과 정원충족률이 낮은 지역이 다수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공급 부족보다는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럼에도 국공립 기관의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며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지역별 편차 완화나 지역 수요에 기반한 체계적인 수급 관리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어린이집과 유치원

은 이용 대상 아동이 동일함에도 수요추계와 그에 따른 공급체계가 상이한 방법으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어,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통합적 관점의 수급관리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0세아의 경우 저소득,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가정돌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부모급여를 서비스 이용 바우처 방식보다 현금급여 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이 밖에 주요 돌봄 서비스 이외에 보조 돌봄을 추가로 이용하는 가구는 약 47%로, 이들은 대부분 조부모 돌봄을 활용하고 있었음. 아이돌보미나 시간제 보육을 보조 돌봄으로 활용하는 비율은 각각 3.5%, 2.2%로 매우 낮았으나, 영아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보조 돌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나 영아기 돌봄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였음. 보조 돌봄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근로시간이 길어 주요 돌봄서비스 이용만으로는 부족해서(27.4%)’로 장시간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음. 현재 돌봄 형태와 희망 돌봄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0.7%로 조사되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불일치 비율이 높았음. 반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희망 돌봄과의 일치 비율이 높아 육아휴직 활성화가 양육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이용 중인 기관에 대해서 5개 항목(접근성, 비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시간,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비용 부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리적 접근성(거리 및 등하원 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음. 서

비스 내용 및 질에 대해서 민간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과 교사의 자질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반면, 가정 어린이집은 체험활동과 특별활동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 변화와 정책 욕구를 살펴보면, 부모급여와 부모육아휴직제도 모두 가정돌봄은 늘리고 기관돌봄은 줄이는 쪽으로 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향후 필요한 정책으로 영아기에는 시간 지원 정책, 그다음은 국공립 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아이가 24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국공립 시설 확대와 함께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심의 기관서비스 공급은 총량적으로 공급 부족보다는 수요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공립 어린이집 또한 정원충족률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됨과 동시에 신도시 및 재개발단지 등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여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역 특성에 기반한 서비스 수급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국공립 기관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다수이나, 민간 기관은 폐원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응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비용 부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 기관서비스 이용 보장을 위한 비용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부모급여,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규 기관 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시간제 보육

과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해당 서비스가 대중적인 보조 돌봄서비스로 기능할 경우 영유아기의 돌봄공백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마지막으로 저출생과 제도 변화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단위의 수요 파악과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형평적 서비스 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공급, 질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 연금자산 분석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고령화는 이를 이미 경험한 국가에 비해서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최근 예측된 기대수명 또한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보장수준은 서로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일반조세방식인 기초연금도 있으나, 근로기간 동안 본인의 노동소득에 따라 연금수준이 결정되는 공적연금의 주된 특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은퇴경로를 반영한 연금자산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고령화되는 추세는 그러한 노인의 삶에 해당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더 필요한 연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재정의 문제는 현대 사회의 큰 이슈이기도 함.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생애주기(life-cycle)을 고려하여 은퇴까지 기대생애소득과 이를 기반

으로 사망시까지 기대연금자산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 결과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의 기본가정에 기초하여 국민연금의 세대별 수급부담구조와 연금자산을 분석해 보았음.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에서는 가입과 수급의 관계가 엄밀한 등식에 기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수급부담구조 분석을 위한 수리적 분석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다루어지는 등식이나 관련 개념에 기초한 분석이 다루어졌음.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득 계층별 구분을 통해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다루어 보았음. 물론, 소득 계층 구분을 위해서 활용된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들이 절대적인 결과라기보다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참고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석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선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 수준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만 25%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음. 연금의 기본적인 취지가 노후소득수준을 대비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에 비추어 보면, 25%의 소득대체율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25% 수준에 해당되는 소득계층은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C4 계층)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이들 계층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 연금액 수준 자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나타내는 저소득 계층이 수급하게 될 연금액 수준 보다는 충분히 여유 있는 연금액 수준

이 될 것으로 생각됨. 한편, 저소득층(C1 계층)의 경우에는 40% 이상의 소득대체율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연금액 수준 자체는 다소 아쉬운 금액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연금액이나 소득대체율 이외에 수익비나 내부수익률에 대한 분석은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의한 수익성을 살펴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된 소득대체율 또는 연금액 수준은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수익성 자체는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익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해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결과임.

○ 결론 및 시사점

- 이러한 분석은 국민연금의 경우 현 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재정계산 결과에서 언급하였듯이 현 제도 및 현재 예상되는 인구구조에서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음. 이는 현 제도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에서 분석한 노후 소득수준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함. 이와 관련하여 부과방식 비용을 분해를 통한 접근에 기초하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노인 부양비와 실질적인 평균 소득대체율에 비례함. 따라서 인구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별도의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
- 불확실한 미래를 예상 가능한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 요인에 해당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개인의 입장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확실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투자

의 관점에서와 같이 분산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층 체계의 연금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야 연금자산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전반적인 연금 제도를 관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의 의약품 사용 지원방안 연구 -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전체 노인 중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비율은 2010년 36.3%에서 2022년 41.9%로 증가하였고 베이비부머가 후기 노인이 되는 2040년에는 52.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 이 연구는 문헌 고찰, 양적 및 질적 자료 분석,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노인의 노화에 따른 의약품 사용 문제를 파악하고 국내외 관련 중재 방법을 조사하여 고령 노인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 결과

- 65세 이상 노인의 1/4이 3종류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였음.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약 40%가 처방약을 3종류 이상 복용하였고, 약 15%는 약을 복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의약품 사용에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음. 특히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는 복합만성질환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3종류 이상 처방받는 비율이 높았음. 고혈압 환자의 3.6%, 당뇨병 환자의 1.6%가 최근 1년간 의사와 상의 없

이 임의로 처방약 복용을 중단한 경험이 있었으며 노인의 부작용 경험률이 노인이 아닌 성인보다 높았음.

- 2019년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9개 지역에서 복합만성질환이 있고 정기적으로 10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약료사업이 실시되었음. 충청북도 1개 군의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는 노인가구 간 이동 거리가 긴 점을 고려하여 마을의 경로당 26곳을 ‘거점돌봄센터’로 지정, 약사가 방문하여 중복약물, 복약순응도, 이상반응 경험 등을 조사하고 상담을 제공하였음. 서울시 1개 구에서 실시된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 관리 시범사업’에서는 의사와 약사가 노인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복용 중인 처방약, 일반의약품을 확인하고, 약물 중복, 복약상태, 부작용 경험 등을 조사하였으며, 필요시 의사와 약사가 협의하여 부적절한 처방을 조정하였음.
-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역포괄케어시스템(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을 구축 중임. 1개의 약국에서 환자의 복약상태를 일괄적·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단골약국제도와 지역포괄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건강서포트 약국을 도입하였으며, 전자 약 수첩을 통해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자신의 전체적인 복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유럽 전역에서 다약제 복용(polypharmacy) 관리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SIMPATHY 프로젝트가 실시되었고,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복합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검토사업을 실시하였음.

○ 결론 및 시사점

- 의약품 사용은 성공적이고 건강한 노화의 요소 중 하나임. 노

인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기능 약화와 복합만성질환으로 인해 중복약물 등 의약품 사용 문제에 취약하므로 노인의 약물 사용 문제를 줄이고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중재가 취약한 노인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제공되어야 함. 또한, 노인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관심을 가지고 진통제 등을 중복 복용하지 않도록 복용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를 중심으로 의사, 약사, 간호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성과 향상을 고려한 사회보험의 정책방향 모색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구 위기로 인해 공적연금 제도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정책환경 변화와 제도 간 관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정책대안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별히 기대수명과 같이 생애 급여 지급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이 공적 건강보장 시스템 뿐 아니라 개인의 소득수준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면, 이를 반영했을 때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는 어떠한 양상을 띄게 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보장의 국민 건강수준 증진 성과를 고려하여 사회보험 지출의 배분 전망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 내용

- 연구의 내용은 먼저 의료비 지출과 국민 건강수준, 공적연금제도의 관계에 대해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 국가 의료비

지출의 국민 건강수준 향상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또한 이론적인 차원에서 의료비 지출과 수명,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 및 급여 수급의 상호관계를 고려했을 때 사회보험을 통한 순혜택의 변화를 검토하였음. 이렇게 검토된 내용들을 토대로 본 원에서 구축한 미시모의실험모형을 통해 정책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여 그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음. 정책 시나리오별 사회보험을 통한 순혜택의 분포 변화 비교를 통해 재분배 차원에서 제도 개혁의 효과를 평가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함.

○ 결론 및 시사점

-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 의료비 지출과 건강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료비 지출과 사회지출은 국민 건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추정됨. 의료비 지출은 기대수명 보다는 당해 사망률에 대해, 그리고 공공보건지출을 포괄하는 사회지출은 단기 사망률보다는 기대수명에 대해 뚜렷한 효과를 보임. 총의료비 지출은 사망률에 대해 공공보건지출에 비해 더 큰 규모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며, 그 경로는 사전적 예방 차원의 효과보다는 사후적 치료 차원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됨.
- 이와 같이 의료비 지출은 사망률의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급여 지출 증가를 의미하기도 함. 특별히 기대수명이 소득이나 교육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이질적인 경우 이는 사회보장을 통한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만약 개인의 소득수준과 기대수명이 양(+)의 상관관계

를 갖는다면, 그리고 공적연금 제도가 소득-기여-급여가 비례하는 구조일 경우, 연금 수급 기간의 차이는 세대 내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됨. 반면 금전적 기여가 아닌 필요(혹은 수요)에 기반한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건강보장시스템은 세대 내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연금과 건강보장, 이질적 기대수명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건강보험 성과 증진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KIHASA SIM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상향 조정하는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전반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여 증가가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보다 큰 것으로 보이나, 수급률이 높고 보험료 납부액이 큰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으므로, 소득재분배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건강보험 성과 증진 시나리오의 경우 급여의 효율성 증대는 현행과 대비했을 때 (차이가 매우 크지는 않지만)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고, 형평성 증대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보임.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수급률(가입률)과 가입기간에 차이가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영향은 중·고소득층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다만 보험료율 상향 조정 폭이 소득대체율 인상 폭 보다 더 큰 개혁은 재정안정화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건강보장에 있어서는 순혜택의 수준에 지출의 효율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부각됨. 이러한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방적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는데, 본 연구의 국가 단위 의료비 지출의 효과 분석 결과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와 더불어 공적 지출과 사적 지출의 효율성 차이는 건강수준 향상을 매개로 제도를 통한 순혜택에 계층간 차이를 일으키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제도의 형평성 증대를 통해 이를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형평성과 효율성이 함께 증진될 때 국민연금까지 고려한 총순혜택이 증가하고 계층 간 편차 감소에도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사회전반의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인구정책의 전면적 재편을 요구받고 있음.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한국보다 앞서 경험하고, 국가적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한 독일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함.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의 선형국가로서 독일 사례를 다룬 기존 연구가 개별적 제도 소개에 그치고 있어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독일 인구전략의 수립 배경과 전개, 경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도전 상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주요 연구 내용

- 독일에서 통독 이후 구동독 지역의 출산율 저하가 두드러졌던

1994년 합계출산율 1.24명을 기록하여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고, 2010년 이후 꾸준히 회복하여 2016년 1.5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3년간 다시 감소하였음. 최근 고학력 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서독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 가족정책의 성과로 이해되고 있음. 독일 인구구조 변화는 2022년 발표된 ‘15차 조정인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였음. 독일은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예상했으나, 최근 10년간 순이민이 추정치보다 증가하면서 2070년까지 인구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장기적으로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주로 순이민 증가로 인해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지역별 인구 격차는 지난 30년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동독은 전반적으로 인구감소가 나타난 반면 서독지역은 인구 증가가 나타난 지역이 대부분이며, 지난 30년간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2070년까지 대부분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큼.

- 독일의 인구전략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 전반의 인구적 적응유연성(Demografieresilienz) 제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된 국가 프로젝트임. 인구전략은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변화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사회가 가진 잠재력과 자원을 활용하고자 함. 인구구조 변화를 국가, 사회, 개인이 당면한 조건들을 재구성하는 전방위적 변화로 인식하고, 기존 인구학적 측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정책 영역을 포함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최적화시키는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 9개의 주제별로 분류된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상향식 대화 프로세스를 특징으로 하는

인구전략은 정부, 주정부, 지자체는 물론 경제,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정책 이해관계집단을 포함하는 대화 프로세스로 진행했음.

- 독일에서는 ‘지속가능한 가족’이라는 패러다임 아래 가족 정책이 추진되었음. 특히 부부간 파트너십에 기반한 정책 변화, 특히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음. 최근 정책적 변화로는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와 ‘아동기본보장’의 정책화가 대표적임. 2023년 ‘어린이집 질 개선법(KiTa-Qualitätsgesetz)’을 도입하는 등 인프라 확장에서 더 나아가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2025년에는 모든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적절한 성장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주고자 ‘아동기본보장(Kindergrundsicherung)’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또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전일제 학교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초등학교 돌봄 기능을 강화할 예정임.
- 독일 연방정부는 ‘동등한 생활조건의 보장’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여 모든 농촌 및 도시 지역의 생활 조건과 근로 조건의 동등성을 지원하고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높은 삶의 질과 좋은 고용 및 환경 조건을 보장하고자 했음. 1990년대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의 목표는 구동·서독의 격차 해소 위주로 다루었으나, 이제는 독일 전체의 농촌과 대도시의 격차 완화에 중점을 둬. 한편, 낙후된 지역(특히 농촌)에 동등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고향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2014년 바이에른에서 처음 도입한 향토정책(Heimatpolitik)은 2018년 대연정 출범 이후 연방 정부 정책 영역으로 포함되어 탄광 지역의 구조적 전환, 디지

털 인프라 확충, 폐철도 노선 활성화,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보고했음. 최근 정책변화로는 2020년 동등성 점검을 도입하여 제안된 법안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생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고, 지역격차 완화와 관련된 6개 부처의 22개 사업을 새로 도입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독일 지원 시스템(GFS)’ 아래로 위치시켜 정책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개발 정책으로 활용되었던 ‘지역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 과제(GRW)’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여 주민의 필수생활서비스, 주민참여, 주민의 삶의 질에도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독일 이민정책은 부족한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 1950년대 초청이민자 제도, 2010년대 이후 외국인 숙련노동자 정책이 대표적임. 최근 독일의 노동 이민정책은 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국외 전문인력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개발하였음. 대표적으로 2020년 도입된 ‘전문인력이민법’은 전문인력 이주와 정착의 기존 장애물을 제거하고 관료주의를 완화한 조치로 특히 제3국 출신 숙련 노동자의 노동 이주 권리를 확대하였음.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민자 일상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민자의 입국과 체류 조건을 완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환영문화(Willkommenskultur)가 사회전반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한편, 이민정책에서 잘못된 인센티브를 피하고 망명권의 인도주의적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동 이주와 망명 이주를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온라인 조사로 진행된 국민인식조사는 독일 국민(20-49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설문지는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인구문제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 등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음. 조사결과는 동일한 설문지로 진행된 한국인 대상 (20-49세 남녀 2500명)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하였음.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인식은 독일인은 결혼할 생각이 있는 비율이 한국인보다 낮지만, 향후 출산 의향은 독일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음. 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 고려 요인으로 독일은 본인의 건강과 배우자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한국은 경제적 여건이 중요도가 높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이 다음 순위를 차지했음. 가사 및 자녀 육아분담에서는 독일과 한국 모두 가사 및 자녀 육아분담에서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음. 양국 모두 남성은 적절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육아 및 가사 분담 비율이 실제 분담 비율보다 높았음. 한편, 독일은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정도를 한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임신 출산 지원,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보육료 지원 등에 대한 인지도는 독일인이 한국인보다 높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기본 조건 또한 한국보다 더 잘 갖춰져 있음.

○ 결론 및 시사점

- 독일 인구전략은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무용론, 운명론적 접근을 경계하고 변화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인식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개별 실무분과를 통해 이루어진 의견수렴은

주제의 방향성, 접근 방식 모두 참여자가 직접 결정하며, 인구 구조 변화에 적절하고 수용도 높은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했음. 또한 연방정부 내 다양한 부처를 아우르는 인구변화 대응 전략 수립 과정은 인구정책 전반을 재구조화하는 데 기여했음.

- 본 연구에서는 독일 인구정책 영역으로 가족정책, 지역정책, 이민정책을 검토하였음. 가족정책에서는 연령통합적인 생애 과정 관점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음. 가족 형성, 재생산 활동,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가족시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또한 부모가 성평등한 돌봄 역할 분담을 목표로 남성이 돌봄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였음.
- ‘동등한 생활조건’ 확보를 위한 지역정책에서는 일관된 정책의 방향성 속에서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한 것이 특징임. 독일의 ‘동등한 생활조건’ 개념은 오랫동안 독일 지역정책에서 핵심적 가치로 여겨져 왔고, 현재에도 이 개념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면서 적용하고 있음.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진행되는 여러 부처의 사업을 한 울타리 안에 위치시켜 협력과 연계가 가능한 기반을 만들고, 지역민들이 지역의 주요 사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이민정책에서는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우려로 이어지자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이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단일민족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국 사회와 닮아있음. 최근에는 전문인력확충법이 도입하면서 이민자에게 매력적인 나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본격화하는 한편, 이민자의 장기적 적응과 사회통합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환

영구구조가 환영문화를 만든다'는 모토 아래 신규이민자를 위한 국가 지원구조를 검토하고 권고안을 개발하는 등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한 '환영문화(Willkommenskultur)'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오랜 기간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2.06명을 기록해 대체출산율을 밑돌기 시작했고, 2023년에는 0.72명까지 하락하였음. 총인구수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합계출산율의 지속적 하락 등으로 2021년과 202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총인구수가 감소하기도 하였음.
- 저출산 현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2005년에 한국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총 네 차례 수립·추진하였음.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추세를 반등시키는 데 실패하였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출산율이 하락하였음.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출생아 수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지속 가능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한편,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를 겪어왔음. 1975년 이후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1989년 ‘1.57 쇼크’ 이후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음. 이에 따라 관련 정책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음. 2005년 일본의 출산율은 반등하여 2015년에는 1.45명을 기록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섬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3년에 어린이 미래전략 정책을 발표하였음.

- 이 연구는 일본의 인구 변화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목적은 일본의 인구정책 현황과 효과성을 살펴보고, 인구 변화,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하여, 한국의 인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주요 연구 내용

-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엔젤 플랜, 신엔젤플랜, 대기아동 해소 프로젝트 등을 거쳐 최근에는 어린이 미래전략 정책이 발표되었음. 고령화 대책은 1989년 골드플랜을 시작으로 신골드플랜, 고령사회대책 기본법, 골드플랜 21 등이 이어졌으며, 제4차 고령사회대책대강 수립에 이르렀음.
- 한편, 일본의 총인구수는 201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년 기준 1억 2,435만 2,00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중 29.68%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수도권 도쿄도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11.3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유소년인구(0~14세)는 11.40%,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59.47%, 노인인구(65세 이상)는 29.13%를 차지함. 혼인율은 2022년을 기준으로 4.1%,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1.1세, 여성 29.7세

로 나타났으며, 출생아 수는 77만 759명, 합계출산율은 1.26명임.

-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0%, 향후 자녀를 출산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3%로, 모두 한국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자녀 출산 시 본인의 건강(81.4%), 배우자의 건강(80.9%), 가정의 경제적 여건(77.8%)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경력 단절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우는 39.5%로 비교적 드물어 한국의 경우(72.2%)와 그 차이가 두드러졌음. 또한, 일본 국민들은 자녀를 갖게 되면 삶에 부정적 영향(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한국에 비해 낮았으나, 이와 동시에 삶에 긍정적 영향(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한국에 비해 낮았음.
- 한편, 인구 변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 최근 출산율을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한국에 비해 일본에서 각각 약 20%p, 15%p 낮게 나타나는 등 한국에서 최근 출산율 수준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일본 조사 대상자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자녀에 대한 수당(71.0%),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70.5%)

순으로 높고,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36.8%),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44.2%) 순으로 낮았으며, 모든 영역에서 한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7.3%로, 한국에 비해 다소 낮았음.

○ 결론 및 시사점

-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음. 먼저, 일본은 재원 확보 방안으로 소비세율 인상, 국채 발행, 사회보험료에 가산한 지원금 제도의 신설, 세출 개혁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왔음. 향후 한국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설될 인구대응특별회계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다음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은 주거 비용 상승, 취업 경쟁 심화, 과밀한 생활 환경 등을 초래하여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향후 정책 수립·추진 시 수도권 인구 및 고용 집중을 완화하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저출산 정책을 보완하고 확충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나, 그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동반되어야 함.
- 다음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이 향후 고령화 정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첫째, 증가하는 독거노인 가구 및 노노가구와 관련된 돌봄의 문제, 개인이 원하는 삶을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 검토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바, 과소지역 대책 긴급조치법, 과소지역 진흥 특별조치법 등 일본

정부의 법 제정과 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셋째, 고령자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사회참여와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므로,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활발히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오랜 기간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음. 이러한 인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동시에 국외의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벤치마크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국외의 정책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프랑스는 저출산 대응에 성공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음.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는 1920년대 말 시작되었는데,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으로 있다가 1963년 합계출산율 2.9명에서 이후 급감하였고, 2000년 이후 증가하여 2006년부터 2.0명 수준을 유지하였음. 그러다 2016년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0년 1.8명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 1.7명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따라서 이 연구는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인구 문제에 개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인구 변화와 이에 대응한 인구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첫째, 프랑스의 인구 변동과 인구 변화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고, 둘째, 프랑스의 직·간접적인 인구정책 현황을 파악하며, 셋째, 프랑스의 인구정책 효과성을 평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넷째,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연구 내용

- 프랑스의 총인구는 2024년 1월 1일 현재 6,840만 명으로 2023년 대비 0.3% 증가한 수준이며,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약 1.68명으로 한국(0.72명)의 약 2.3배임. 프랑스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23년 31.0세로 한국(33.6세)보다 5.6세 낮은 수준임. 프랑스에서 인구정책은 가족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이며, 2024년 현재 더 강한 프랑스를 위한 ‘인구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임. 프랑스는 아동 양육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용의 경감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에게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며 소득세의 가족계수를 통해 세금을 경감하도록 지원하는 등 포괄적인 가족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수당 정책은 가족수당을 제외하고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구에게까지 지원되는 수당이 없다는 것과 수당 금액이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또한 세금 감면을 위한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를 설정하고 많은 지원 정책에 활용하고 있으며 전업주부(parent au foyer)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업주부(재택부모) 노령

보험(L'assurance vieillesse du parent au foyer, AVPF)이 추진되고 있음.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이사지원금(La prime de déménagement)과 다자녀 가구 카드(Carte familles nombreuses) 지원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개인 맞춤형 주거 지원(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APL), 가족 주거 지원금(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ALF), 사회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ALS) 등이 청년을 포함하여, 젊은 세대,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음.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휴가(Congé de maternité), 배우자 출산휴가 및 자녀돌봄휴가(Congé de paternité et d'accueil de l'enfant), 입양휴가(Congé d'adoption), 육아휴직(Congé parental d'éducation) 등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보육 지원 정책으로 단일서비스수당(PSU) 및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CMS) 정책과 세액 공제(Impôt sur le revenu-Crédit d'impôt) 등이 추진되고 있음. 임신과 출산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Assurance maladie)에서 100% 보장되고 있으며, 난임 치료를 위해 20세 전후 모든 사람에게 '난임 검사'가 제공되고 있음. 한편,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노후의 경제적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서 연금개혁이 추진되어 법정퇴직연령은 2023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 64세가 적용되는 한편 최소 연금 수령액은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확대되었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프랑스 사회보장 재정(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의 개혁에 있어서 일반사회기여금(CSG)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부담금뿐만 아니라 모든 가용 소득에 대해 부담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CSG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오면서 프랑스 복지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음. 다만, 소득에 있어서 높은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CSG의 경우 부자들에게 대한 부담은 크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2024년 7월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는 20~49세 이하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인식과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출산 시 고려하는 사항에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매우 중요하다’까지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배우자의 건강(4.37점), 본인의 건강(4.35점), 주거(4.26점), 일생활 균형(4.23점), 본인의 취업 상태(4.15점), 가정의 경제적 여건(4.14점), 배우자의 취업 상태(4.08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3.91점),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3.77점), 경력 단절의 가능성(3.63점), 정부의 충분한 지원(3.52점) 순으로 중요도가 도출되었음. 자녀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프랑스인은 경제적 부담 증가(4.02점), 기쁨과 만족(3.87점), 자유의 제한(3.74점), 노년기 부양(3.43점), 본인 일할 기회 축소(3.31점), 파트너 일할 기회 축소(3.16점), 파트너 친밀감 증가(3.13점) 순으로 나타났음. 프랑스인은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의 항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한국인과 비교해서 자녀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프랑스

인의 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에 대한 평가 의견에 대해 5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프랑스인은 프랑스 사회에 대해 한국인과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인구의 변화와 관련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한 결과, 프랑스인은 한국인보다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의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또한, 출산율 감소가 본인과 미래 세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한국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프랑스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정책에 대해 프랑스인의 약 70% 이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프랑스인이 인구 현상과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에 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임.

○ 결론 및 시사점

- 프랑스는 과거에 저출산을 극복하였고 최근 프랑스 자국의 출산율 감소에 대한 사회적 염려와 대조적으로 출산율은 2023년 현재 1.68명으로 높은 수준임. 프랑스가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인의 관련 인식과 무관하지 않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는 한국과 비교해서 프랑스인이 자녀 출산 및 인구와 인구정책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 출산 시 고려하는 사항에 있어서 한국인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프랑스인은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한국인은 모든 항목의 중요도를 프랑스인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

할 만한 차이임.

- 프랑스 사회에 대해서도 한국인과 비교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프랑스인은 한국인에 비해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며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이에 따라 세부적인 인구정책에 대해서 약 70% 이상이 인지하고 있고 한국인에 비해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하고 있음. 프랑스는 1930년대부터 인구정책을 추진하였고, 출산율 장려하는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음. 인구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 사회의 근본적,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30년대 들어 스웨덴은 산업화로 인한 출산율 감소를 경험하였고, 알바와 군나르 뮈르달 부부는 과학적·민주적 방식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부모됨 유도 필요성 강조하며 출산율 저하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 당시 다자녀 가정 주거 지원, 유급 출산휴가, 피임기구 판매 허용, 낙태 규제 완화 등이 주요 정책으로 도입되었음. 1960년대 이후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 증가와 지위 상승에 따른 대응으로 성평등 정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 부모휴가 제도가 확대되고 공공 보육 서비스가 전국적 확대되어 부모의 육아 부담 감소,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촉진, 가정 내 성역할 평등 향상 등으로 이어짐. 최근까지 스웨덴은 보편적이고 관대한 가족정책으로 부모와 아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부담을 낮춤. 그럼에도 스웨덴에서도 2010년대 이후 출산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18세기까지 스웨덴의 인구는 200만 명 이하였지만, 꾸준한 인구 성장으로 2023년에는 1,055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스웨덴 인구성장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대 수명 증가와 국제적 이민자 증가로 꼽힘. 1930년대에 감소하였던 스웨덴 인구는 20세기 중반 이후 정책적 노력으로 안정화되었으나 최근 다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와 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지목됨. 스웨덴 기대 수명은 여성 84.9세, 남성 81.6세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인구 고령화로 이어짐.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의료·복지 시스템 부담 증가, 사회적 비용 확대 등의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음.

○ 주요 연구 결과

-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 감소, 고용률 증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이는 높은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연대임금제도와 포괄적 단체교섭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음.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안정적이고 관대한 실업급여를 제공하하는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해 직업훈련, 공공 고용 창출, 임금보조금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함. 이민자 지원에게는 스웨덴어 교육, 직업훈련, 시민 교육 등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수당도 지급함.

- 스웨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 충당 목적으로 이민자와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지만, 1970년대 경제 침체로 노동 이민 규모를 축소하였음. 스웨덴의 초기 이민자 정책은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평등한 처우와 문화 다양성을 강조하였지만, 점차 사회통합을 강조하며 스웨덴어 및 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음. 최근에는 고숙련 노동자 이민은 장려하지만, 비숙련 노동자 이민은 제한하고 있으며 난민은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수용하고 있음.
- 스웨덴의 가족정책에 대한 예산 투입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는 부모 모두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를 목적으로 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 주도로 제공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가 차등 적용됨. 가족을 위한 대표적인 현금 급여로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이 보편적이고 관대하게 제공되고 있음. 학생 및 실업자에게도 유급 육아 휴직 제도가 적용됨.
- 스웨덴의 공적연금은 보편적 복지 원칙 구현과 노인 빈곤 감소라는 목표를 위해 발전해왔음. 1990년대 연금 개혁을 통해 스웨덴의 공적연금은 확정기여형 체계로 전환되었고, 생애 소득을 기반으로 급여액이 계산되기 시작하였으며 기대 수명 및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장치가 도입되었음. 현재 스웨덴의 공적연금 체계는 보장연금, 소득연금, 프리미엄연금 등 세 가지로 구성됨. 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성이 확보되었지만, 소득대

체율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직장연금의 중요성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남.

○ 결론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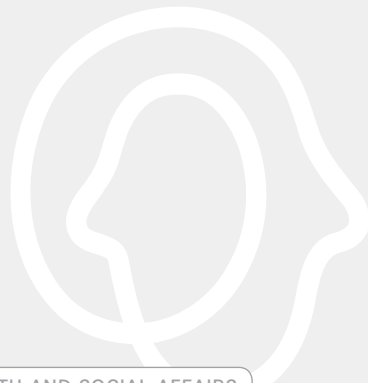
-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가족정책뿐 아니라 노동시장정책, 이민자 정책, 노후 소득보장 정책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스웨덴은 인구문제를 ‘인구정책’으로 국한하지 않고 다각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려 노력하였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이민자 정착 지원, 안정적 노후 소득보장 등 다양한 정책이 출산율 유지에 기여하였음. 한국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정책의 파편화를 탈피하고,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여 장기적 시각에서 사회구조적 개선과 정책 간 정합성을 확보해야 함.
- 스웨덴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였고, 그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며 보편적 교육·직업훈련 및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 최근 스웨덴에서 이민자 관련 갈등과 사회문제가 보고되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스웨덴의 인종·종교 갈등 수준은 낮은 수준임. 한국 역시 낮은 출산율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자 유입이 불가피한 상태이므로 스웨덴처럼 포용적이고 평등한 이민자 정책 도입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스웨덴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양육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전통적 성별분업 대신 평등한 성역할과 새로운 가족 모델을 만들어 왔음. 한국이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비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 현금 지원과 서비스 확대를 넘어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고,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양육 가정을 평등하게 지원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과제 향후 방향성

제1절 전문가 의견

제2절 향후 추진 필요 과제

제 5 장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과제 향후 방향성

제1절 전문가 의견

□ 인구현상을 비롯한 저출산·고령사회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에서 향후 5년간 추진했으면 혹은 추진이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서면 방식으로 취합함.

○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각 정책 영역별 전문가 총 25명에게 이메일을 발송, 총 11명의 의견이 취합됨.

□ 다음의 3가지 내용을 전문가에게 제공하고 서면 의견을 취합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각 분야 파급효과의 가속화
- 인구 변화 속도의 가속화와 고착화
- 저출산 추세와 인구 고령화 및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의 급격한 진전, 본격적 인구 감소 시대 진입
- 인구변동 영향의 인구집단, 지역, 세대, 지속성 별로 개별화, 다양화, 이질화 경향 강화 전망
- 인구정책적 적극 대응을 위한 연구 필요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 도래, ‘인구전략기획부(2025)’ 설립 등 고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인구정책기획단)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

상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기초연구, 정책 연구, 조사자료 구축,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최근 4년간(2021~2024년) 인구 및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수행 연구과제 개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제 규정 중 ‘인구정책기획단’ 역할

〈표 5-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직제 규정

제18조(인구정책기획단) 인구정책기획단에는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를 두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 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 의제 개발 및 국가전략 기획
- 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국제비교 연구와 국내 대책 연구
- 다. 저출산과 연관된 개인 및 가족 차원의 주요 특성 연구
- 라. 인구고령화와 연관된 사회·경제·문화적 영향과 대응 연구
- 마. 인구 구조변화와 연관된 중장기적 대응방안 연구
- 바. 원내외 저출산·고령화 정책 협의체 운영 주관 및 인구관련 해외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2.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

- 가. 인구구조와 분포의 변화 추이 및 특성 분석
- 나.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이동)의 내·외생적 영향요인과 상호관계에 관한 이론 및 실증 연구
- 다. 인구변동 모니터링 지표 개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구변동 모니터링 수행
- 라. 인구가구 추계 모형 연구 및 인구 기초가공통계 개발
- 마. 인구정책 의제 개발, 평가방법 연구 및 정책 평가

제2절 향후 추진 필요 과제

1. 유배우 출산율 변동의 사회경제적 원인에 대한 심층연구: 〈가족과 출산〉 시계열 자료 분석

가. 배경 및 필요성

□ 초저출산의 지속과 유배우 출산율 변화

-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며,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후 회복하지 못하는 현상이 5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
- 출산율을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로 분해 분석한 연구들은(이철희 2023; 2019) 이전에는 혼인의 지연으로 인한 혼인율 하락이 출산율 하락을 주도했지만, 최근 들어 유배우 출산율의 하락도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락이 합계출산율 1.0 미만의 초저출산으로 연결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유배우 출산율 분석 연구에 따르면(계봉오, 유삼현, 최슬기 2022),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유배우 출산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2015년 이후 유배우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했으며 이러한 하락이 최근의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음.
- 이는 최근의 유배우 출산율 변동이 급격한 출산율 변동의 주된 원인을 보여주지만, 유배우 출산율 하락의 사회경제적 원인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는 충분히 축적되어 오지 못함.

나. 연구 내용

□ 〈가족과 출산〉 시계열 자료 분석

○ 〈가족과 출산〉 자료

- 〈가족과 출산〉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력 조사〉를 2021년에 개편한 조사자료인데 3년마다 조사되는 자료로 한국사회의 출산율을 연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로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서는 1991년 이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가족과 출산〉 자료의 특징

- 2021년 개편 이전에 여러 차례 변화를 겪으면서 목표로 하는 모집단에 변화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충분한 유배우 여성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다른 조사자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족과 출산〉 조사의 특징점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면 1991년 이후 지난 30년 동안의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음.
- 연도마다 중점적으로 조사한 항목이 다르므로 분석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유배우 출산율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연구방법

○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 유배우 출산율 분석

- 기간-기반(duration-based) 접근을 활용한 유배우 출산율의 템포와 수준(tempo and quantum) 파악
 - 〈가족과 출산〉 조사는 혼인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계봉오, 유삼현, 최슬기(2022)에서 활용한 기간-기반 접근을 활용해서 유배우 출산율을 파악할 수 있음.
 - 이를 통해서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을 활용한 분석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성 있는 유배우 출산율 추정치를 생산할 수 있음.
 - 유배우 출산율의 수준 변화를 파악

○ 유배우 출산율의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 분석

- 교육, 가구소득, 노동시장 참가, 남편의 특성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유배우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함.
-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유배우 출산율 변화가 가구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사회적으로 발생했다는 경험적 연구가 존재함(계봉오, 유삼현 2023).
- 〈가족과 출산〉 조사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서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가 유배우 출산율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

□ 기대효과

- 유배우 출산율의 결정요인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초저출산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

〈참고문헌〉

- 계봉오, 유삼현. (2023). 소득계층별 유배우 출산율 추세와 전망.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계봉오, 유삼현, 최슬기. (2022). 유배우 출산율 변화, 2005~2020: 혼인지속 기간 접근. 한국인구학 45(4): 71-92.
- 이철희. (2023). 1992년~2021년 한국 출생아 수 변화 요인 분해: 여성인구, 결혼, 자녀수별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 한국인구학 46(3): 79-110
- 이철희. (2019). 출생아 수 변화요인 분석과 장래전망. 한국경제의 분석 25(1): 37-77.

2. 국내이주와 정주, 결혼, 출산에 대한 연구 - 청년들의 삶 경로와 지역을 중심으로

가. 배경 및 필요성

- 지역별 혼인율, 출산율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매우 다양하게 수행되어왔음. 서울 등 대도시 거주자, 저소득층에서 혼인,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으나 이는 대체로 단면적 분석으로 청년들의 삶의 경로와 선택을 파악하지 못함.
- 청년층의 이주는 주로 대학 입학과 취업을 계기로 이루어지며 이는 20대 진입시기의 이주, 20대 중후반의 이주로 포착됨.
- 똑같이 서울에 거주하는 30~40대 중에서도 서울에 몇 년이나 거주하였는지, 원가족의 거주지는 어디였는지 등에 따라 출산율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지역 중소도시 및 군 지역에서 인근 광역시로 이주한 청년과 광역시 정주 청년의 결혼, 출산 역시 체계적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

음. 젠더 규범의 변화가 서울, 수도권에 비해 느린 광역시, 중소도시에서 정주 중인 청년의 경우 혼인과 출산율이 높을 수 있음(경상북도의 저출산 전략은 여기에 착안).

- 소득 수준에 따른 혼인, 출산의 격차 역시 분석되어 있으나 이는 대체로 청년 본인의 소득에 대한 것으로 재생산 불평등(reproductive inequality)을 온전히 포착하기 어려웠음. 청년의 거주지역과 정주 기간, 원가족의 자산과 상속 자산을 고려하는 분석이 필요

나. 연구 내용

- 국내 이주와 결혼, 출산에 대한 분석
 - 지역별(서울,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군) 청년의 이주 경험 조사
 - 잠재집단분석 등을 활용하여 양상을 포착한 후 집단별 혼인과 출산 현황 분석
- 국내 이주와 결혼, 출산의 관계를 개인 소득 및 원가족의 자산 수준에 따라 층화 분석 및 교차 분석
 - 청년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층화
 - 원가족의 자산 수준에 따른 층화 및 청년 본인 소득과 원가족 자산수준의 상호작용 변수의 효과 파악

3. 육아휴직, 누가 언제 사용하는가?

가.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 대응책으로 육아휴직은 기간이나 대상이 확대되어 왔으며, 예전에 비해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음.
- 그렇지만 누가,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음.
 - 자녀가 1세 혹은 7세 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지, 회사나 사용자의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등을 실제로 본다면 육아휴직 제도의 필요성이나 개선점 등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나. 연구 내용

- 육아휴직 사용경험에 대해 조사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도 언제쯤 사용할 것 같은지 조사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 또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자 제도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 분석해 봄.
 - 이를 바탕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개선점 등이 도출되기를 기대함.
 - 육아휴직의 사용에 대해서 묻는 대규모의 통계자료는 「육아휴직 실태조사(통계청)」가 있으나 개인 및 회사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언제 사용하는지 등을 이야기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고용보험 DB」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가용한 자료를 활용해 육아휴직 사용시기나 사용 후 패턴(예컨대 육아휴직 사용 이후 복귀 양상,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이 일종의 퇴직금으로 활용될 가능성 등) 등을 함께 살핀다면 저출산을 둘러싼 가장 강력한 제도 중의 하나인 육아휴직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여성의 재생산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연구

가. 배경 및 필요성

□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보건의료체계 구축 미비

-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정책 변화 미흡
 - 안전한 임신중단을 보장할 법적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되지 않음: 임신 중지에 건강보험 미적용, 유산 유도제 승인 보류 등

□ 인구정책에서 공백 상태인 여성의 재생산 건강 보장 정책 마련 시급

- 안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임신, 출산, 피임, 가족계획 등을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재생산건강이 보장되는 환경이 장기적으로 여성의 출산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

나. 연구 내용

-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보장 논의 검토
 - 한국 사회의 임신 중지 비범죄화 논의 역사적 검토
 - 해외 논의 검토: WHO 재생산건강 논의,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등
- 임신 중지 보건의료체계 현황 및 공백 진단
 - 임신 중단에 대한 의료 접근성 현황
 - 임신 중단 여성 지원 체계 현황 검토: 상담, 의료 지원 등
- 임신 중지 경험 연구(「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재분석 또는 별도 설문조사)
 - 의료적 지원 공백: 안전한 임신 중지 정보 부재 등
 - 사회·문화적 지원 공백: 사회적 지지 여부, 가족의 지지 여부 등
-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제안
 - (예를 들어) 현재 위기 임신 지원에 임신 중지 지원 체계 통합 필요

5.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가. 배경 및 필요성

- 2022년부터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연간 1조 원 가
까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배분하기 시작

- 막대한 재원이 지출되었지만, 이 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3년간의 실적자료가 축적된 시점에서 이 기금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 내용

- 지방소멸 대응 기금 배분 기준의 적정성 평가
 - 과거 3년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어떤 기준에 따라 배분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이 지역 인구 불균형 문제 대응에 적절한지를 평가
- 배분된 기금 사용 현황 및 타당성 분석
 -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가 어떤 사업에 기금을 이용했는지를 분석하고, 다양한 잠재적 사업 가운데 지역 인구 감소 문제 대응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쓰였는지 분석
-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지원의 효과성 평가
 - 지방소멸기금 지원이 실제로 해당 지역 인구문제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

6. 이민 정책과 인구 구조 변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 전 세계적으로 인구 구조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

화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고령화 사회와 출산율 감소는 많은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

○ 이민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민 정책은 특정 국가의 경제 및 사회적 요구에 맞춰 설계

○ 이민 정책과 인구 구조 변화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각국이 직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

□ 연구 목적

○ 이민 정책이 국가의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이민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나. 연구 내용

□ 이민 정책의 개념 및 목적

- 이민 정책의 정의 및 주요 목표(예: 경제 성장, 인구 유지, 사회 통합 등)
- 각국의 이민 정책 유형(예: 경제 이민, 가족 재결합, 난민 수용 등)

□ 인구 구조 변화의 원인

- 고령화: 평균 수명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현상
- 출산율 저하: 글로벌화와 경제적 요인이 결합되어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 사회적 변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및 경력 추구, 결혼 및 출산 연령 상승 등으로 인한 출산율 변화

□ 이민 정책이 인구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이민 정책의 설계가 인구 연령 구조에 미치는 영향: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연령 비율 변화
- 이민 정책이 성 비율 및 민족 구성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 정책적 대응 및 제안

- 효과적인 이민 정책 개발을 위한 필요성 및 방향성
-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 정책의 구체적인 제안

7.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이주배경인구를 중심으로

가.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나, 이러한 연령별 인구구조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통찰은 부족했음. 특히, 국제화 및 국내 이민정책 환경변화와 더불어 이주배경인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현재까지 연구는 사회통합 및 다문화 포용의 관점에서 이주배경 인구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또는, 이주배경 아동,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특정 이주배경인구집단에 국한하여 진행된 연구가 대부분임.

- 반면, 연령별, 성별, 지역별 등 기존의 인구구조에서 이주배경 인구의 비중, 분포, 특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통합적인 연구는 부족함.

나. 연구 내용

□ 이주배경인구의 정의

- (국제) 법적, 정책적 정의, 통계적 정의 등
- (국내) 법적, 정책적 정의, 통계적 정의 등
- 이주배경인구의 분류 및 주요 집단

□ 이주배경인구의 현황

- 통계청 내외국인 인구전망 통계표 재가공, 분석
- 기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한 인구현황 이주배경인구 현황 분석
- 이주배경인구 전망

□ 이주배경인구 대응 정책 현황

- 이민, 출입국 관련
- 사회서비스 보장 관련
- 사회통합 관련

□ 이주배경인구 대응 정책 제안

8.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관련 인프라 조정 방안

가. 배경 및 필요성

-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관련 인력 및 시설 인프라 수급 상황 파악 및

중장기 대응책 마련 시급

-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라 이미, 아동과 청소년, 노인 분야에 종사하는 관련 인력과 시설 인프라의 수급에 변화와 조정이 일어나고 있음.
 - 전국 및 지역 단위에서 아동시설을 노인시설로 전환하거나 관련 인력의 이직이 발생,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변동에 대응한 수급 전망과 계획을 마련, 체계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야 할 시점
 - 인구변동(출생, 사망, 연령별 구성, 규모)에 따라 관련 인프라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반대로 인프라 여건이 인구변동(이동, 지역소멸 등)에 영향을 주기도 함.
 - 인구의 안정적 유지와 지역사회 지속을 사회적으로 지탱해 줄 수 있는 관련 체계가 충실히 갖추어져 있는가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나. 연구 내용

- 아동 및 청소년, 노인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변화와 전망
 - 전국 및 지역단위의 인력, 시설, 관련 예산 등 추이
 - 규모의 증감과 함께 지역 간 이동 상황 파악 중요
 - 향후 인구변동에 따른 수급 전망과 과제
 - 변동으로 과잉과 부족 등 파악, 증설 및 축소, 기능 전환의 필요성 검토

□ 인구변동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 관련 인프라 수급 및 조정 방안

○ 단기, 중기, 장기 과제 도출 및 연차별 시행계획 구체화

- 국내외 관련 현황 및 사례 검토, 국내외 전문가 의견조사
- 인프라 관련 기준 및 법제도 현황 및 제한점 파악
- 인프라 점검 및 수급관리,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지표 개발
- 과제수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조직, 예산, 시스템) 검토

9. 저출산·고령화와 사회보장체계 대응

가.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변화해야 할 사회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 필요

○ 지금까지의 연구과제들은 대다수가 한 가지의 단위 이슈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연구과제가 진행되어왔음.

- 이와 관련하여,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보장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핵심이슈들을 도출하는 연구과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회보장체계 네 제도 간 역학관계, 저출생고령화, 가족 분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현상을 반영한 접근 방식 고려

나. 연구 내용

○ 향후 인구추이 변화 예측과 사회보장체계의 변화

- 핵심적으로 변화해야할 우선 정책과제 도출
- 각 과제별 세부 추진전략 마련

10. 인구정책 추진체계 개혁 및 고도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 및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추진되고 있음.
- 여야 정당 모두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인구정책을 총괄, 기획하는 인구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함.
- 지난 20년 동안 저출산·고령사회 인구정책의 근거 법률이 되어 오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전면 개정안이 발의됨. 저출생정책과 국제이동 확대, 인구부의 중앙정부 기획, 관리, 조정 기능 강화를 추진하는 반면, 고령사회정책, 국내이동, 사업 집행,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는 무관심하거나 축소, 제외됨.
 - 인구부와 별도로 행안부가 지방소멸대응(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시대위원회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서로 연계성 부족함.
-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앙부처, 지자체, 사업, 평가, 인구영향평가 및 연구기관 등 인구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향성은 있지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편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 개편 후 세부 운영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나. 연구 내용

□ 법률 검토 및 개정 방향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기획 및 조정, 수립, 모니터링, 평가

□ 중앙부처 및 위원회 운영 방향

- 인구부, 행안부 역할 분담
- 복지부, 기재부, 여가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 역할 및 관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 및 역할

□ 중앙부처-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거버넌스

- 광역지자체 거버넌스
- 기초지자체 거버넌스

□ 정책 영역 및 사업

- 저출생정책
- 고령사회정책: 확대 및 보완
- 인구이동: 국제인구이동뿐만 아니라 국내인구이동 추가 필요성 및 논점

11. 첨단기술이 적용된 노인 일자리의 제도화 방안

가. 배경 및 필요성

- 국가적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 정보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의 불평등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필요
-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로봇 / AI 기술을 적용받는 수동적 존재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기술 사용의 주체로 노인이 활동할 수 있고, 노인 인구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새로운 노인 일자리를 개척하고자 하는 것임.
- 로봇 / AI가 적용된 기술이 기존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는 경로가 개척되면, 추가적인 기술 개발과 고숙련 노인을 위한 새로운 노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 내용

- 노인 일자리 현황 분석
- 로봇 / AI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노인 일자리의 비용 효과 분석
- 로봇 / AI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노인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 분석
- 로봇 / AI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의 만족도 분석